

제422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8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철회 동의의 건

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3)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9)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5)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7)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1)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91)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4)

9.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9)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2)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5)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90)

1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1)

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0)

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4)

1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5)

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6)

1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8)

19.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면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1)

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8)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9)

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6)

2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8)
2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7)
2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2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4)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9)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3)
2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5)
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0)
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0)
3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0)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1)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2)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6)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4)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4)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1)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7)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5)
4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9)
4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3)
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7)
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0)
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1)
4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0)
4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5)
4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1)
4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7)
5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6)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9)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4)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6)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7)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5)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9)
6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6)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0)
6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3)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8)
6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3)
7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
7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2)
7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5)
7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2)
7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5)
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8)
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1)
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3)
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3)
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6)
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2)
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0)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5)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8)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4)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0)
8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4)
8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9)
8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1)

9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7)
9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0)
9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3)
9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6)
9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18)
9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1)
9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0)
9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4)
9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9)
9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2)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2)
101.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용혜인 의원·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4)
10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1)
10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0)
10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4)
105.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고동의 외 63,61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3)
1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6)
1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4)
10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90)
10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5)
1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0)
11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546)
1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6)
1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6)
11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8)
1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9)
1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1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4)
1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1)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9)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3)
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3)
12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5)
125.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12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6)
1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4)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9)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1)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7)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6)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4)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9)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4)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5)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8)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7)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0)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4)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6)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4)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6)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1)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2)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8)
154.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3)
15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3)
156.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5)
15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2)
1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7)
15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2)
16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3)
1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3)
1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8)
1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2)
1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2)
1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
16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16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16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1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170.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2)
1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17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17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3)
17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4)
17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2)
17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5)
17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4)
17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2)
17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0)
18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5)
1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8)
1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8)

1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0)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7)
1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9)
18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4)
1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7)
1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88)
1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4)
1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5)
1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1)
19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3)
19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3)
19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1)
19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9)
19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19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1)
1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7)
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6)
2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3)
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0)
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3)
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5)
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1)
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5)
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7)
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8)
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7)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0)
21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3)
2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0)
2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4)
2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5)
21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1)

215.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2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219.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220.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2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2)
2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6)
223.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6)
224.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1)
225.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9)
22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1)
2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3)
2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5)
2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4)
2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23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7)
23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900)
23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9)
23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8)
23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2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3)
238. 업무 보고
 - 가. 행정안전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인사혁신처

라. 경찰청

마. 소방청

상정된 안건

1. 철회 동의의 건 17
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3)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8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9) 18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5) 18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7) 18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1) 18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91) 18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4) 18
9.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9) 18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2) 18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5) 18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90) 18
1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1) 18
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0) 18
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4) 18
1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5) 18
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6) 18
1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8) 18
19.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면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1) 18
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8) 18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9) 18
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6) 19
2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8) 19
2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7) 19
2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19
2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4) 19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9) 19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3) 19

2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5)	19
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0)	19
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0)	19
3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0)	19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1)	19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2)	19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6)	19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4)	19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4)	19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1)	19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7)	19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5)	19
4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9)	19
4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3)	19
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7)	19
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00)	19
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31)	19
4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0)	19
4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5)	19
4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1)	19
4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7)	19
5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6)	19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9)	19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4)	19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19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19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19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19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19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6)	1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7)	20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5)	20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5)	2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20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2)	20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9)	20

6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6)	20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0)	20
6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3)	20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8)	20
6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3)	20
7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	20
7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2)	20
7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5)	20
7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2)	20
7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5)	20
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8)	20
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1)	20
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3)	20
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3)	20
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6)	20
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2)	20
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0)	20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5)	20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8)	20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20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4)	20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0)	20
8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4)	20
8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9)	20
8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1)	20
9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7)	20
9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0)	21
9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3)	21
9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6)	21
9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18)	21
9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1)	21
9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0)	21
9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4)	21
9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9)	21
9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2)	21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2)	21
101.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용혜인 의원·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4)	21
10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1)	21
10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0)	21
10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4)	21
105.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고동의 외 63,61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3)	21
1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6)	21
1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4)	21
10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90)	21
10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5)	21
1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0)	21
11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546)	21
1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21
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6)	21
1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6)	21
11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8)	22
1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9)	22
1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22
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22

1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4)	22
1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1)	22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9)	22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3)	22
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3)	22
12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5)	22
125.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22
12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6)	22
1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4)	22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9)	22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22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1)	22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7)	22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6)	22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22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4)	22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9)	22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4)	22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5)	22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22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22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8)	22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22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22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22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7)	22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0)	22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4)	22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6)	22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4)	22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6)	22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1)	22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2)	22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23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8)	23
154.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3)	23

15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3)	23
156.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5)	23
15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2)	23
1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7)	23
15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2)	23
16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3)	23
1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3)	23
1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8)	23
1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2)	23
1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2)	23
1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	23
16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23
16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23
16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23
1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23
170.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2)	23
1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23
17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23
17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3)	23
17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4)	23
17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2)	23
17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5)	23
17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4)	23
17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2)	23
17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0)	23
18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5)	23
1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8)	23
1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8)	23
1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0)	23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7)	23
1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9)	23
18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4)	23
1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7)	24
1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88)	24

1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4)	24
1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5)	24
1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1)	24
19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3)	24
19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3)	24
19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1)	24
19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9)	24
19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24
19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1)	24
1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7)	24
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6)	24
2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3)	24
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0)	24
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3)	24
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5)	24
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1)	24
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5)	24
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7)	24
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8)	24
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7)	24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0)	24
21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3)	24
2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0)	24
2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4)	24
2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5)	24
21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1)	24
215.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24
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24
2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24
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24
219.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25

220.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25
2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2)	25
2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6)	25
2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6)	25
2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1)	25
2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9)	25
22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25
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1)	25
2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3)	25
2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5)	25
2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4)	25
2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25
23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7)	25
23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900)	25
23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9)	25
23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8)	25
23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25
2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3)	25
238. 업무 보고	28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인사혁신처	
라. 경찰청	
마. 소방청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4일 부산 복합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여섯 분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먼저 법률안 철회 동의를 건과 심사기간이 도과한 청원에 대한 심사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후에 행정안전부 등 주요 5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마지막 현안질의 이후로도 탄핵심판의 진행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선관위 병력 투입 등 각종 현안이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며 경찰 고위직 인사 등 새로운 이슈도 발생한 만큼 오늘 업무보고에서 충실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되었거나 직위가 변경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입법조사관.

홍선기 입법조사관.

박성용 입법조사관.

그리고 윤여문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철회 동의를 건

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3)

(10시15분)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를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 법안을 발의하신 김교홍 의원 등 8인으로부터 법안 철회 요구가 있어서 국회법 제90조 1항 단서 및 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이미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 법안의 철회 동의를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17건의 청원 중 3건의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법 125조 제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청원 3건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9)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5)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7)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1)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91)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4)
9.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9)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2)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5)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90)
1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1)
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0)
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4)
1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5)
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6)
1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8)
19. 울릉도·독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1)
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8)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9)

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6)
2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8)
2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7)
2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2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4)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9)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3)
2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5)
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0)
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0)
3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0)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1)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2)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6)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4)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4)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1)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7)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5)
4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9)
4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3)
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7)
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00)
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31)
4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0)
4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5)
4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1)
4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7)
5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6)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9)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4)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6)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7)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5)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9)
6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6)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0)
6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3)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8)
6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3)
7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
7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2)
7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5)
7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2)
7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5)
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8)
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1)
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3)
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3)
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6)
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2)
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0)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5)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8)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4)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0)
8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4)
8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9)
8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1)
9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7)

9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0)
9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3)
9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6)
9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18)
9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1)
9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0)
9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4)
9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9)
9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2)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2)
101.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용혜인 의원·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4)
10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1)
10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0)
10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4)
105.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고동의 외 63,61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3)
1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6)
1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4)
10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90)
10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5)
1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0)
11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546)
1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6)
1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6)

11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8)
1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9)
1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1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4)
1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1)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9)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3)
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3)
12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5)
125.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12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6)
1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4)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9)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1)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7)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6)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4)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9)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4)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5)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8)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7)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0)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4)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6)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4)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6)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1)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2)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8)
154.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3)
15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3)
156.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5)
15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2)
1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7)
15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2)
16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3)
1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3)
1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8)
1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2)
1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2)
1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
16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16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16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1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170.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2)
1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17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17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3)
17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4)
17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2)
17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5)
17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4)
17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2)
17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0)
18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5)
1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8)
1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8)
1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0)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7)
1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9)
18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4)

1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7)
1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88)
1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4)
1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5)
1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1)
19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3)
19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3)
19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1)
19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9)
19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19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1)
1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7)
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6)
2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3)
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0)
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3)
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5)
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1)
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5)
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7)
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8)
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7)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0)
21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3)
2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0)
2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4)
2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5)
21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1)
215.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2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 219.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 220.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 2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2)
- 2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6)
- 2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6)
- 2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1)
- 2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9)
- 22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 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1)
- 2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3)
- 2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5)
- 2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4)
- 2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 23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7)
- 23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900)
- 23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9)
- 23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8)
- 23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 2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3)

(10시17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7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33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3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60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조직 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제외,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들에 비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조항들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조직과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조합원 권익 향상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익적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유사업에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서 타 법인에 비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이 상법에 따라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 변경 전후의 법인을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타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법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와 제105조의2에 따르면 조직 변경 전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합니다.

이에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 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 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 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 원의 출자금 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증가액은 310만 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받아서 3배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도시 중과세는 수도권 인구 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도

시 주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들을 폭넓게 인정하여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에서도 꼭 필요한 부문이며 지역 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도시 인구 유입 등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특성상 출자금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매년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금이 소액만 증가해도 11만 2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수도권에 있는 협동조합은 여기에 3배가 가산된 33만 7500원을 내야 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협동조합 출자금 증가액 현실을 반영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 면허세 최저한세 제외를 적용해서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에 따른 건당 4만 200원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엔 등 국제사회는 사회연대경제가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 등 현대사회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각국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동조합의 해는 지난 2012년에 이은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인데요. 유엔이 매년 어떤 해를 지정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같은 주제를 선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회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방안으로서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출한 개정안들이 통과가 되면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 돌봄 위기 등 각종 사회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이 모쪼록 제안드린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곧바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조은희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그리고 조승환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38. 업무 보고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인사혁신처

라. 경찰청

마. 소방청

(10시25분)

○위원장 **신정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8항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기관별 건제순으로 기관장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관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지원체계를 정립하며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우리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4대 분야에서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안전 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약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총력 지원과 소멸 위기 극복 시책 강화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지방시대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촉진하는 등 지방자치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디지털로 혁신하는 정부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

는 한편 국민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는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생과 저성장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광복 제8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 추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계획은 배포된 서면 업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차관보입니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입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입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입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입니다.

이창규 조직국장입니다.

남제현 경찰국장입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입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에 국민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상황 속에 저와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3월 5일에는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최초로 실시됩니다. 전국적으로 총 1100여 개의 금고와 430여만 회원이 참여하는 공직선거에 못지않은 규모의 선거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생활 주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신뢰 회복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4월 2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도 짧은 기간이지만 빈틈없이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감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조그마한 실수도 공정한 선거관리에 커다란 흠결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과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환경 변화 및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선거관리 과정의 참여와 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해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안내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관계법 운용 선례, 불필요한 규제 및 법규 운용 기준을 정비하고 수요자 관점에 맞추어 정치관계 법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사회 여론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조작·왜곡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내실 있는 감사 활동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늘 되새기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의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철훈 사무차장입니다.

조규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광호 선거정책실장입니다.

김수연 정보관리국장입니다.

윤재수 선거1국장입니다.

도희락 법제국장입니다.

조봉기 조사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평소 저희 인사혁신처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소관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해 예방과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공무원을 신속하게 중간관리자로 임용하는 5급 선발 승진제를 신설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보다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국정 현안인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하는 등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고 퇴직 공무원의 공직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사혁신처는 모든 공직자가 국민에게 헌신하고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차장입니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입니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입니다.

오영렬 인사관리국장입니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입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입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금년도 경찰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을 둘러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의 경찰관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범죄와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민생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 악성 사기, 불법 사금융 등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마약·도박 범죄는 강력한 의지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의 안전까지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순찰과 예방 활동으로 생활 주변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각종 재난과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익명성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의 근원을 밝혀 엄벌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음주·마약 운전 등 중대 사고 요인 특별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되 불법행위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적 중대사인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경호, 행사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관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 가겠습니다.

인재 양성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과정의 내실을 다져 치안 역량을 끌어올리겠습니다.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업무 전반에 접목하여 치안 활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제고해 책임수사기관으로서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치안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과 운영 효과, 현장 여건까지 면밀히 살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고민하고 공감받는 경찰 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준수 기획조정관입니다.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입니다.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병찬 수사국장입니다.

유재성 형사국장입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입니다.

곽병우 치안상황관리관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석곤 소방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소방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풍수해와 산불이 빈번해지고 전기차와 리튬 배터리 화재 등 과거에 없던 유형의 재난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안전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방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으며 기존의 대응 방식을 넘어 보다 진화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방청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고 미래의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설정한 목표와 과제들이 단순히 시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생활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소방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중심의 실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현장의 지휘체계를 정교하게 정비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AI 기반의 119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활동까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적시에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체계와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변화에 발맞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예방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기차와 리튬 배터리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 제도를 개선하고 숙박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철저한 소방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장비를 첨단화하고 K-소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 소방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보급된 장비가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소방이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안전에 전념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사기는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최적의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신 건강 돌봄체계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 조직과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잊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소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소방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국 기획조정관직무대리입니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입니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입니다.

진형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김학근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김재운 구조과장입니다.

박진수 소방분석제도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은 3분 내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위원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박종섭 그리고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조정래, 내용 거의 똑같이 해서 지금 베껴 내다시피 했는데요.

오늘 현안질의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인데 검증 당사자 중 2명이 지금 기관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에 있는 현재 탄핵심판의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때문이다라는 변명을 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입맛대로 맞춰서 나오고 싶은 데는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은 데는 안 나오는 윤석열 정부의 임명된 공무원들의 이런 작태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ですよ, 오후의 문제라면 오전에는 최소한 출석해서 국회의 질의에,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 좀 불러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오늘 올해 업무보고하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 행안위 소관 대상 진화위 업무보고를 갖다가 우리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제외시켰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신 겁니까? 진화위 업무보고……

○**위원장 신정훈** 말씀하세요.

○**김종양 위원** 빠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진화위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여기에 참석했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 가지고 물러났었는데, 사실 기관장 임명에 있어 가지고 여야 공히 다 동의하는 그런 사람을 임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소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출석해서 업무에 대해서 답변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화위도 엄연한 우리 행안위 소관 기관인데 업무보고는커녕 기관장이 여기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 재고해 주시고. 오늘 오후라도 와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다음에라도 꼭 와서 업무보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그런 현안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승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조승환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또 엄중한 시기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시기도 여야도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번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시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이 공식 석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공염불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산업은행 이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13일 제기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은 겉으로는 여야, 정부가 모두 찬성한다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법안들은 소위 논의, 공청회 일정이 잘만 잡히는데 유독 이 법안만 공청회 날짜조차 협의되지 않고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 부산은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부산을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고 2020년에서 2050년 사이 서울 인구 21.4%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에 부산은 33.5%의 인구감소가 예측되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그 어떤 상임위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임 위임에도 이처럼 법안 통과에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동남권 발전 등의 말들이 동남권 민심을 얻기 위한 달콤한 공염불, 허언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인 대한민국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3월 임시회에는 공청회가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진행발언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조승환 위원님이 부산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뭘니까? 한 번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시위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쭙봤는데 이쪽에, 야당 측에는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서 내용을 모릅니다. 내용 좀 알려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부산에서 내용을 좀……

○**조승환 위원** 전재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부산에서 와서 내용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부산이 망해 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부산만 망해 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도시 많으니까 부산에서 그렇게 하면 시위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무력시위 하지 마시고 와서 설명하시면서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신정훈** 예.

○**이달희 위원** 선관위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투표소 현장에 투입된 선거사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12만 5295명 가운데 공무원이 6만 4723명, 비공무원이 6만 572명으로 전체 48.3%가 비공무원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추이를, 부실 선거에 대한 추이를 좀 보고자 합니다. 20대·21대 총선에 참여한 선거사무원에 대해서도 전체 인원을 공무원·비공무원으로 구분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안 하려고 했다가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고 약간의 답변일 수도 있고, 제가 답변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원래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이렇게 상정이 되면 대체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로 논의하도록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개정법이 아니고 제정법이기에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정치적 쟁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조승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적어도 입법 공청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쟁점이 있으면 입법 공청회를 통해서 야당 위원이든 아니면 야당 소속 위원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을 피력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달라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린 거예요.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일일이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라는 게 형성이 돼 있고 법안심사소위라는 전문적인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러면 다른 법하고 형평성을 따져 보면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도해서 만든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이번에 간토 대학살과 관련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들은 글로벌허브 특별법보다 훨씬 뒤에 발의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미 입법 공청회를 다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다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적 이행에 대해서 왜 이것을 붙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승환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부산의 시장님이나 관계된 분들이, 상당수의 분들이……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야당 간사님도 설명을 다 들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듣고서 설명을 나한테 안 했으니까 이것 설명을 제대로 충실하게 노력을 안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오해라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만 이 법안은요 지금 강원도 특별법 그리고 제주도 특별법, 전라북도 특별법, 이전에 있는 그 법안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논의조차 안 하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서울청 직원 두 분이 출석하지 않으셨다고 기관증인인데

왜 출석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하셨는데요.

업무보고 때 서울청 간부들이 출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도 없었고요. 그런데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지금 박현수 서울청장대리께서 출석하셨는데 그분은 자의로 출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국정감사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 현안에 관련돼 있는 사람, 현안질의도 아닌 상태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청 간부가 나오지 않았다고 오후까지 나오라, 오전까지 나오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간사 간 협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님 그리고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이 문제가 일단 여야 간의 간사 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여타의 관련 법과 마찬가지로 원만히 협의되고 합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님 ‘이 어려운 시기에 여야가 없다’, 공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야가 필요 없는 그런 민생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노력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 이 부분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공청회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김종양 위원님 진화위 업무보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업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진화위하고 이태원특조위 이런 산하기관들은 이번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회의에서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관련해서 충실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성희 위원님 지금 증인 출석요구를 하셨고 또 조은희 간사님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범위 자체가 우리 행안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될 내용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듭니다.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된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의 사항인지……

소위 말해서 오늘 지금 가장 주요한 업무보고 내용 중의 하나가, 경찰청 관련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마 지금 작금의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경찰청에 이런 지금…… 오후 2시에 있는 현재의 시위, 그것도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찰 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 차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오전에라도 빨리 오셔서 하고 또 사정에 맞게 그렇게 퇴장해도 제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안위 업무보고, 현안질의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12·3 계엄령 사태 이후 관련자들의 국회 답변, 그러니까 행안위 상임위 답변, 이후에 검찰이나 경찰에 나가서 한 증언 내용이 거의 180도 다르다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검경 조사라든가 현재 진술에서는 비교적…… 일부의 허위 진술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전에 나와서 행안위에서 발언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허위 진술입니다.

형사피의자로서의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국가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진술이 지금 국회 행안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행안위하고 경찰이 여기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아직도 내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 윤석열의 증인 출석 또 거짓 진술을 거부하면서 뒤늦게라도 경찰 수장으로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내란의 주요 종사자인 이상민 그리고 김봉식 이런 사람들은 현재에 출석해서까지 거짓 진술을 남발하고 있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금의 경찰 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란을 은폐하고 비호하고 획책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부끄러운 자화상을 조금이라도 가책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으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내란 사태를 정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장의 수뇌부가 구속되고 조사받고 있는 이 현실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성하고 자숙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하는 자세로서 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행안위원회 정도는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인사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기관장들께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면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7분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그리고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의 슬로건처럼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고 싶었으나 노상원 수첩에 적힌 체포 대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비상계엄에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이호영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행님, 윤석열의 죄명이 뭐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내란……

○정춘생 위원 내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내란죄로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내란 우두머리지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공소장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내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그 이름과 술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가 김건희라는 사실 외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문제는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지난 12·12 담화에서 질서유지 목적으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며 만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부터 취했을 것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2월 4일 오전 12시 30분 윤석열은 박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2분 뒤 오전 12시 32분 계엄군들은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국회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을 체포하기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왜냐,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박종근 사령관은 김현태 단장과 통화하면서 공포탄이라도 쏘야 하나, 테이저건이라도 쏘야 하나, 단전이라도 해야 하나, 방법을 논의합니다. 계엄군들은 본관 4층을 배회하다 오전 1시 1분 지하 1층으로 이동합니다. 곧이어 1시 6분경 분전함으로 가서 전력을 차단합니다. 5분 48초간 지하 1층의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직무대행님, 이 사항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봤습니다.

○정춘생 위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내란의 증거가 하나 더 확인된 것입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정춘생 위원 계엄군은 전력을 왜 차단했을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 당사자가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춘생 위원 윤석열이 의결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빨리 끌어내라고 하니까 그 방법을 찾던 와중에 전력을 차단한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표결하지 못하도록.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황상?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정춘생 위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단전 시간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그리고 국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정춘생 위원 내란 세력의 계획대로 국회의 기능은 마비됐을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대로 수거됐을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한테서 받은 비상지시 문건대로 비상입법기구가 세워졌을 것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것처럼 윤석열은 반대 세력들 모두 수거하고 개헌을 통해 3선 집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직무대행님, 계엄군들이 단전 조치하는 영상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된 것 알고 계십니까? 국수본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관련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국회협력단의 조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사실은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춘생 위원 국회사무처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출입증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국회 출입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인지 출입을 했고 국회협력단 사무실도 출입합니다. 범죄거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공문서부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도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히 수사해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다음, 박현수 국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수 경찰국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근무한 뒤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로 임명됐습니다. 총경에서 치안정감까지 3계급 승진하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데 박 국장은 12·3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알기에는 충분히 저번에 국정조사 때 소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서울청 허브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당시, 좀 지나서 국회가 완전 봉쇄됐고 임정주 경비국장과 통화한 후에 바로 또 2차로 봉쇄됐습니다. 그리고 강상문 영등포경찰

서장과 통화한 후에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체포조가 투입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전체적으로 알겠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떻게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정춘생 위원 이쯤 되면 이런 상황들이, 모든 상황들이 박현수 경찰국장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까지는 참고인 조사 정도 받았고요. 충분히 소명한 걸로 아는데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본 위원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인사라고 보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박현수 국장 인사검증 자료 제출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인사검증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정춘생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확인할 입장이 아닙니다. 인사검증단에서……

○정춘생 위원 검증 자료도 제출 안 했고요. 통상적으로 복수로 추천이 되는데 단수 추천됐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디로 말씀이십니까?

○정춘생 위원 추천, 경찰청장직무대행이 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 추천 말씀입니까? 승진 내정 추천이요, 자치경찰위 추천입니까?

○정춘생 위원 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때는 소규모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책임자 정해서 추천한 겁니다. 그것은 뭐 복수니 단수니 이것은 여러 명 대규모 인사일 때 하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춘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수로 추천해서 그중에서 책임자를 채택을 하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사전에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정춘생 위원 사전에 누구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행안부장관직무대행과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그런 협의를 거쳐서 소규모 인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사람 단수 추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오후에 보충질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고기동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배준영 위원 조삼모사라는 말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도토리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다가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러니까 만족해서 박수 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 추경예산에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것을 포함해 갖고 13조 원의 예산이 잡힌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삼모사고 그냥 국민을 원숭이로 알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 결국은 내 세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결국은 이게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낼 세금이기 때문에 조삼모사와 같은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잡힌 내용은 아시고,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발표된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전 국민한테 1인당 25만 원씩 주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 원 받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전 국민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면……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원숭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생을 위한 지원금, 국민이 반대합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면 반대하지요. 그래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결과에서는 반대하고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반대하고 그리고 천지일보라는 데서 하는 데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 국민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은 코로나19 당시 여러 차례 지급했는데 결과가, KDI 연구를 보니까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저축·채무 상환에 따른 거고 신규 소비 효과는 26%에서 36%에 그친다, 이런 내용 들어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들어 봤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재난지원금을 2020년·21년도 이렇게 1차·2차·3차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면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결국은 3~4%의 물가를 견인해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미래 소비를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해 그 이후에 오히려 지출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경영학회지 2021년 8월,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사용 종료 이후 시기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소비를 오히려 줄이는 소비 행태로 추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행님,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민이 갚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채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1조 원당 시중금리가 0.01%, 그러니까 13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약 0.13% 정도 금리가 오른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대출이 많은…… 지금 전 국민 민간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수치라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빚 갚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런 의견도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 표를 보세요.

민생회복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면 대규모 추경이 일어나고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러면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내자, 말하자면 뱀 꼬리를 무는 듯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전으로 하는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결국은 소비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결국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글썄요, 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는 어쨌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조삼모사와 같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말로 국민들을 대하고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5년 1월 31일까지요. ‘추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중에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나 여론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은 생각하는데 지금 밀어붙일 것 같이 하고 예산안에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위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철회를 해야 되

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이호영 차장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하고 현안질의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서 경찰청 인사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지금 출석요구에 대해서 합당치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회의가 끝난다면 저는 이 위원회의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인사에 대한 의구심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실 거니까, 예상하시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피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집회 상황 한번 검토해 보고요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집회 상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오늘 14시 즈음해서 집회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지금 오면 되겠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14시면 2시간밖에 안 남아서……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일절 협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진행하십니까, 아무리 의석이 많다 그래도요.

그리고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인사 라인 담당 국장들이 업무보고 때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쟁용 증인 출석을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강행하시면 이것은 굉장히……

○이광희 위원 내란 문제를 정쟁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조은희 위원 왜 그러십니까? 말하는데 그렇게 꼭 버릇처럼 그러십니까?

○이광희 위원 그것을 정쟁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좀 들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정쟁용 증인 출석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야당은 여당 간사한테 일절 협의조차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적절한 의사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인 겁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였던 사람이 경찰의 고위직으로 인사되고 승진되고 하는 현실에서 국회 행안위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찾기 위한 것 아닙니까. 즉 경찰 인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인사 승진했던 사람이 출석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여야 간의 협의 대상입니까.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 안 나오는 게 협의 대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데요. 내란 임무에 종사해서 벼락출세하고 보은 인사한 사람 불러다가 점검해 보자……

○조은희 위원 제가 단무지입니까?

○윤건영 위원 제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관여 안 했잖아요.

○조은희 위원 제가 그렇게 짜장면, 단무지 얘기했습니까?

○윤건영 위원 그러자고 해서 불렀는데 두 사람 모두가 오후 2시에 있는 현재 집회를 핑계로 안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피해 가려고요?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다 요리조리 피해 갔습니다. 행안위에 나와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거짓말했어요. 12월 5일 날 여기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 일을 또 반복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관련자들 다 불러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이게 여야 협의 대상인가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조은희 위원님……

○김종양 위원 오늘 주요 임무가 업무보고 듣는 자리 아닌가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인데 현안질의라는 말은 또 왜 새로 나오는 겁니까?

○윤건영 위원 업무보고 하면 현안질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종양 위원 현안질의라도 그 주가 있잖아요. 짜장면 시켰으면……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짜장면 드셔야지요. 갑자기 짬뽕을 드시니까……

○윤건영 위원 짬뽕 시켜도 단무지 나와요.

○위원장 신정훈 윤건영 위원님, 두 분……

○김종양 위원 그리고 지금 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믿고 맡기고 있는 우중수 본부장도……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그만하시라니까요.

○김종양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란 임무 종사자라고 단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요.

입만 열면 저 김종양 이름 외치더라고요, 위원장님은.

○위원장 신정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조은희 위원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강행이지요.

○위성곤 위원 이럴수록 저희가 볼 때는 그 두 양반이 국민의힘 부역자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할수록.

○김종양 위원 부역자를, 부역자 지금……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조은희 위원 정당한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여야 위원님, 먼저 제 이야기 듣고……

○위성곤 위원 간부가 승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적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국회의 몫이지, 그러면 누가 합니까? 되도 않는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좀 따라 줍시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이 자리의 엄중함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장관이 내란에 연루돼 가지고 파면되다시피 해서 쫓겨 나간 그런 행안부의 업무보고고 또 청장과 서울청장이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지금 구속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인사가 터졌단 말이에요.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슨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까? 경찰청 인사 대상자, 그리고 서울청에 지금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분들, 앉아 있는 참석자들이 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출석했습니까? 업무와 관련되면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이 요구했으면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것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란도 용서할 수 없지만 내란에 대한 동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란을 그야말로 통치면서 덮고 가겠다 이런 식의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들이 나와서 소명하고 또 그것이 클리어하게 정리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행안위의 회의 진행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호영 차장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14시 변론이 있지만 대통령 출발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회·시위가 진행 중이고요. 경력은 46개 기동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상황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경찰 시스템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게요. 집회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국회가 만만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상황 파악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여당을 너무 만만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기본인데 왜요?

○조은희 위원 그건 기본 아닙니다.

○윤건영 위원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든지요.

○위원장 신정훈 이 업무보고가 잡히는 동기 중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경찰청 인사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직원 출석은 당연한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 명심하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응당한 대응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은희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위원장 신정훈 간사님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저도 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은희 위원 지금 행안위 업무보고 전체회의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현안 회의라고 갑자기 바꾸십니까?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업무보고가 현안 회의고 현안 회의가…… 당연히 다투는 게 맞지요. 도 대체 조은희 간사님은 조은희 간사님 마음대로 하셔야 이 회의가 됩니까? 발언 좀 합시다.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간사님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조은희 간사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충분히 여당 간사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사, 이번 이 회의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꼭 해소돼야 되고 또 규명돼야 될 내용들이 경찰청 인사 관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업무에 비해서 이 회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간부 둘을 오라 안 오라,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옹혜인 위원 그만하시지요.

○이광희 위원 그만하세요,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앞으로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어떻게 여당 간사한테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조은희 위원님의 허락을 말아야 사람이 오고 말고 합니까.

○정동만 위원 모든 회의는 합의를 좀 하세요.

○위원장 신정훈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이광희 위원 저기 지금 합의 다 돼서 오신 겁니까?

○조은희 위원 협의는 해 주셔야지요.

○정동만 위원 모든 회의가 협의는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달희 위원 간사님이 협의 안 했다 하잖아요.

○옹혜인 위원 어제 국방위는 합의해서 했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앞으로 필수적으로 합의돼야 될 내용과……

○옹혜인 위원 필요할 때만 합의 타령하고.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얼른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이 진행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

야 간사 간의 합의 사항들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질의 전에 1분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의 간부들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하고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버리면……

○**위성곤 위원** 예, 30초만 쓰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누구 발언은 자르고 누구 발언은 해 주고 그러시는 것은 공평한 게 아니지요.

○**김종양 위원** 공정하게 합시다, 공정하게.

○**박정현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윤건영 위원** 공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공정하게 해 주세요, 공정하게.

○**위성곤 위원**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질의해 주세요.

○**위성곤 위원** 그냥 질의할게요! 됐지요, 됐어요?

○**김종양 위원** 목소리 크시네. 목소리 너무 크시다.

○**조승환 위원** 뭘 그렇게 억압적으로 그러십니까?

○**윤건영 위원** 말 자꾸 자르고, 참나.

○**위성곤 위원**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신정훈** 조금만 좀……

○**위성곤 위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조은희 위원**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조승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옹혜인 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좀!

○**조승환 위원** 다시 질의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갖고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위성곤 위원** 무슨 억압적이에요.

○**옹혜인 위원** 뭐가 억압적이에요.

○**조승환 위원** 마이크까지 켜고 억압적으로 하시네요. ‘질의 좀 합시다’ 이게 억압적 아닙니까?

○**옹혜인 위원** 그게 뭐가 억압적이에요? 그 정도 얘기도 못 합니까, 소리 지르셔 놓고!

○**조승환 위원** 나는 억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느꼈으면 느끼는 거예요. 왜 목소리 높여요!

○**옹혜인 위원** 남의 질의 순서에 끼어들어 가지고……

○**조승환 위원** 남의 질의 순서가……

○**옹혜인 위원** 억압적이니 뭐니…… 책상 치지 마세요!

○**조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조승환 위원** 목소리를 왜 그렇게 울려요!

○**옹혜인 위원** 목소리는 먼저 올리셨거든요!

○**이성권 위원** 적당히 하세요.

○**조승환 위원** 용 위원님.

○**옹혜인 위원** 지금 먼저 올리셨거든요!

○**이성권 위원** 용 위원님도 적당히 좀 하세요.

○**옹혜인 위원** 적당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적당히 하셔야지요.

○**위원장 신정훈** 자, 위원님들, 제가 진행 과정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이 자리가 할 이야기를 하고 또 들을 이야기는 들어 주는 그런 행안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성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얼마든지 들어 줄 수 있는데요. 본질의 하기 전에 바로 붙여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제지를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진행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질의 7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 업무보고에서 현안을 다루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와 현안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0년 넘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현안 질의한다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간부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입니다. 경무관으로 승진한 두 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의 합의 여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국회의원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럴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경무관은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출석해야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호영 청장님, 그렇지 않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는 게 당연한데……

○**위성곤 위원** 당연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안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불가피한 지점이, 사실은 두 분 다 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공안전차장이고 생활안전차장이기 때문에 한 분만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질의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이 모양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에 충성을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하는 인사가 이번 인사에 발탁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이번 승진 인사 7명 중의 4명인데요. 박현수 서울청장직무대리는 치안감 승진에 9개월 걸렸고 치안정감 승진에 1년 4개월 걸렸습니다. 남제현 경무관은 1년 만에 치안감 승진했어요. 조정래 1년 만에, 박종섭 6개월 만에 승진했습니다. 평균으로 보시면 치안감 승진은 평균 3년이 걸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납득할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사회가 부글부글거리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하면, 정권에 충성하면 승진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더군다나 이번 인사는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다 보은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분들을 승진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비호하고 있고. 도대체 말이 됩니까?

청장님, 이런 인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드릴 말씀이 없다니, 인사권자가 드릴 말씀이 없으면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차피 이분들은…… 저희들은 행안부 직무대행과 제가 상의해서, 협의해서 역량 있고 이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을 추천한 것뿐이고요.

○**위성곤 위원** 그러면 경찰청장께서 추천한 게 아니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협의해서 추천을……

○**위성곤 위원** 협의라는 것이, 누가 먼저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은 이래야 좋겠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인사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행안부차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경우는, 치안정감인 경우는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지금 현재……

○**위성곤 위원** 서울경찰청이, 서울경찰청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있는 치안정감 중에 전보 인사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1년 4개월 만에 박현수 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하고 경찰청으로 발령한 것 아닙니까. 음모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란을 꿈꾸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엄중한 시기에 인사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소규모 인사를 하다 보니 1명만 승진 내정하게 된 거고요.

○**위성곤 위원** 청장, 그것은 변명이지요. 소규모 인사인데 4명이 승진 인사예요. 전보 인사만 해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치안감 자리들이 다 엄중해서 공식으로 둘 수 없어서, 빈자리가 원래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인사를 3명 정도 소규모로……

○**위성곤 위원** 전보 인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승진이 필요했다면, 이런 분들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직에, 수사과 먼 직에 놓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현업에 배치시킨 것 아닙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청장님, 인사 전에 혹시 다른 곳에서 전화받은 적 없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최근에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최근에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2월 7일, 2월 4일 전후로 해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2월 3일에 청장께서는 사실상 인사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얘기 한 기억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얘기 기억이 없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위성곤 위원 2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국수본부장후보를 비롯해 총경 이상 급은 검토할 사안이 없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 국수본부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국수본부장 자체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전체로 묶어서 기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국수본부장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인사는 언제부터 기획된 겁니까? 며칠날 고기동 직무대행과 협의를 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설 전에, 한 1월 22일쯤 그쯤에 제가 가서 장관직무대행과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의 필요성과 인사의 여러 가지…… 인사에는 A B C D가 있고 A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때 승진자들을 대충 협의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승진자들을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성곤 위원 그날 협의를 하신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차피 전체적으로 놓고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놓고서 소폭으로 인사하는데 이 양반, 이 양반들은 승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다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요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위원들이 경찰청 인사에 대해서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흠결이 없는 승진임용 인사에도 불구하고 벼락 인사, 인사 만행, 이례적 인사 이렇게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은 경찰 길들이기 혹은 대국민적인 경찰 신뢰 붕괴를 의도한 것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3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차장님, 만일에 경찰 정기인사가 이번에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경찰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인사 지연을 걱정한다든지, 특히 갑작스럽게 대선이 진행될 경우에는 정기인사가 스톱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저와 같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에 가면 많이 듣거든요.

차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원래는 통상 12월 달에 인사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 인사는 일반 부처하고 달라서 전국적으로 인사 규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위직 승진부터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도 간 인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위직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렇게 인사를 앓고 있으면 공석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일선 치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처음에 민주당이 비판할 때 벼락 인사라 해 가지고 모든 게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시기에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찰공무원 조직의 인사가 정지되고 그로 인해서 경찰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직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번에 인사를 한 사람, 특히 그중에서 박현수 직무대리에 대해서 이례적인 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호영 차장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총경 이하까지만 최저근무연수가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저근무연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없습니다.

○**이성권 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 직무대리의 치안정감 승진 내정을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통상적인 인사 관행이나 제도에 거의 부합한다고 보는데요.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좀 빠른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것들을 보면 빠른 경우는 1년 4개월, 1년 5개월 걸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로는 이때도 비판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빠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 표 한번 봐 주시지요.

그리고 이번 4명의 승진 사례 중에서 대통령실 근무로 인해서 초고속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게 내란이나 계엄하고 관련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기 보면 나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던 경무관들이 치안감으로 승진을 했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지요.

여기 경찰청장이 된 분들을 보면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관계된 직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박현수 직무대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중에서 시·도청장을 거치지 않고 서울청장이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이 두 분들의 사례를 보면 시·도청장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주재관으로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치안감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하면 지금의 승진을 이례적이고 초고속 승진이고 잘못된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잘못된 인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정기인사를 통해서 경찰 조직의 안정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박현수 직무대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 기사들을 봤는데 하나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직무대리에 대해서 민생 분야의 경력이 없어서 서울청장직무대리 수행이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박현수 서울청장직무대리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입니다.

○**이성권 위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민생치안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경찰 생활, 현재 지금 삼십여 년 근무를 하면서 나름 민생치안 분야에도 근무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이력서를 검색해 가지고 적어 왔는데요, 승진하는 과정을 보면 경위 시절에는 서울 일선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도 하고 경제범죄 수사관으로서 근무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 업무들이 다 민생치안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경감 때는 지방의 방범순찰대장으로 근무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생치안과 다 관련된 거지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경정으로 근무할 때 서울청의 홍보계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언론을 담당하고 있지만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브리핑하는 내용이라든지 경찰청과 관련된 주요 업무 설명을 하는 분야들이 어떤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주로 생안, 교통, 수사와 같은 민생치안 분야입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총경 이후에는 서울광진경찰서장 및 본청 위기관리센터장을 했는데 광진경찰서의 경우는 소관 지역이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지역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래 경찰 업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섭렵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근무 경력을 보면 민생치안 분야의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어쨌든 그런 일부의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서울청장으로서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민생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야당의 비판이 있습니다. 직무대행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불법 아닌지, 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서울경찰청 박현수 직무대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서울청장직무대리입니다.

○이광희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박현수 청장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세요.

○이광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서울경찰청 A 경정이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불출마와 관련해 ‘좌충우돌식 정치적 패착에 대한 귀결로 보인다’라는 정치적 멘트를 리트윗해서 해당 경찰인 경정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 아시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떻게 아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이광희 위원 본인이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행위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 당시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설명해 보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제가 그 당시에 서울청의 뉴미디어홍보계장으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그 당일,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제가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지급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과 함께 이것을 테스트해 보는 과정에서 버튼 조작 실수로 이런 리트윗이 되게 된 것이고……

○이광희 위원 직무대리님, 지금 이 내용은 당시에 찾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경찰 조직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 당시에 제가 이 트윗을 작성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트윗을 작성한 것을 리트윗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미 직무대리는 공직자로서의 그 원칙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전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고속 승진 하신 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위원님, 그 당시에 제가 버튼 조작 실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광희 위원 저는요, 앞으로도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직무대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초고속 엘리베이터 승진이지요. 경찰 조직 내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는 혹은 수십 년을 기다리는 동안 직무대리는 1년 6개월 만에 고속 승진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제가……

○이광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을 함부로 훼손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인만의 능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제가 인사에 관련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승진 코스는요 결국 경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는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지금 세간에 돌고 있는 김건희 인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인사 맞아요? 본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건은 또 있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일 날이지요. 당시에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직무대리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두 차례 통화합니다. 10시 31분 비상계엄이 터지고 10시 31분 당시에 15초와 42초에 걸쳐서, 이때 무슨 내용

으로 통화하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조지호 청장께서 전화가 오서 가지고 저보고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사실과 행안부 상황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조지호 청장이, 내란을 진두지휘하신 사람이 내란이 일어난 것 아냐고 전화를 했다는 말을 누구, 어느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저에게 여쭙보신 겁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그걸 여쭙보신 겁니다.

○**이광희 위원** 내란이 터졌냐고 여쭙보셨어요, 내란을 알고 계시냐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여쭙보신 겁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내란의 주동자가, 내란을 막 일으켜 가지고 경찰들을 동원까지 해서, 그 3시간 전에 대통령을 만났었던 자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해 가지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문의를 했고 행안부 상황을 문의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자, 다시요.

그 전화 당시가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출동을 알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력 배치를 보고한 직후의 시점이었어요. 더군다나 새벽 1시에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국회 봉쇄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장까지도 통화하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영등포서장과 통화한 것은 국회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민 장관과는 뭐라고 통화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이상민 장관과는 그 전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된 이후에 제가 조지호 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경찰 상황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상민 장관께 전달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하고는 무슨 얘기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계엄 상황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하필이면 당시에 경찰청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란과 관련된 얘기들을 박현수 직무대리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다 본인과 통화를 해요. 이걸 내란의 중심에 있었다, 내란에 참여했었다고 볼 개연성이 없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일체 내란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언론에는 이상민 장관과 통화한 이유가 단순한 안부 확인이었다고 발언을 한 사실도 있어요. 이 시간에, 1시쯤에 내란이 터졌는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게 진술한 바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당시 상황이 국가 내란으로 비화된 상황이었고 또 박현수 직무대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핵심적인 요직에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내란 세력과 함께 움직였다는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당시에……

○이광희 위원 오늘 또 여기서 얘기하시고 또 다시 수사를 받을 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 국회에서 분노가 많은 게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셨던 조지호 청장 이하 김봉식 서울청장, 전부 거짓말하고 가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계엄 관계자들과 통화를 한 것은……

○이광희 위원 그 통화 하고 나서 직무대리는 계엄과 관련돼서 업무명령을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전혀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른 사람하고 다시 통화를, 부하 직원들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국장으로서 계엄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해서 관계자들과 통화한 것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광희 위원 저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로 치안정감 승진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스스로 포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오늘 업무보고에서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의 근원을 밝혀 엄벌하겠다고 하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달희 위원 우리 사회에 지난해 8월에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서 학생과 학생끼리 또 교원을 상대로 해서 청소년들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장난삼아 이렇게 딥페이크 음란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엄청 많이 일으켜서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사건 발생 이후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기관이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피해 지원, 단속 강화, 예산 확보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은 어떤 방지책을 마련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딥페이크 가려내는 프로그램……

○이달희 위원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마련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전담반 편성해서 집중단속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서 9월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이 그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대행님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전반적으로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 법이 발안된 건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 개정안에는 제작·유포뿐만 아니라 시청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최대 7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소위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15일 광주에서 개최된 탄핵 찬성 집회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어린 학생들이 드나드는 공개된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을 성적으로 희화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개적으로 영상으로 유포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는 단순한 대통령 모욕 이런 부분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될 수 없다 이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이 집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아까 앞에, 시청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하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버젓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그 불법 영상물을 틀었습니다. 그걸 시청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을 제작·유포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실태입니다. 이 채널에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이 게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영상은 우리나라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까지 제작돼서 해외로 마구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의 모욕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모욕입니다.

심지어 그 밑에 보면 댓글에 ‘국정원에서 삭제하기 전에 공유해 달라’는 문구가 있어요. 특히 또 여기에 후원금도 유도하면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중단속 기간인데 이 부분, 광주에서 틀기 전에도 이렇게 딥페이크가 성행되고 있었는데 경찰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 수사 착수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채널은 아마 차단은 됐는데 일부 재생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방심위에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이 많은 영상들은 어떻게 삭제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해외에 나와 있는 것은 그쪽 나라 사법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인터넷에 퍼진 영상물은 단순히 삭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유포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성적 대상물이 되어서 딥페이크에

희생이 돼서 전 세계에 일어로, 영어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데 경찰이 그동안 집중 단속 한다는 그 허울 좋은 그런 것만 한 것 아닌가 진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토요일의 광주 집회에는 야당의 의원님들 그리고 단체장들도 많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나 단체장들 계시는 시간에 이 영상이 유포됐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악질적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다 있는 그런 집회에서, 사전에 시간을 제가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있는 시간에 이 영상이 유포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딤편이크 범죄는 여야가 견해를 달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성범죄 근절과 인권을 보호하는 공당이라면 이러한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도 한 번쯤 논평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같이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 반포, 상영하는 것까지 다 처벌,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법이 몇 개 통과돼서 여야가 합의하고 예산도 다 반영시켰는데 삭감 예산으로 인해서 4월 달부터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당에서도 함께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딤편이크 성범죄로 우리 청소년들이 물들지 않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울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이호영 직무대행님, 박현수 치안정감 인사 할 때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신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추천권을.

본인이 추천하신 것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추천 내용이나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 위에서 찍어서 내려온 거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이해식 위원 단수 추천된 거지요? 단수 추천된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지금 외부에 나타나는 것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고 내정이 끝난 이후에 추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청장직무대리로 보할 때 그럴 때에는 치안정감 지금 7명 그대로 두고 승진해서 한 이유가 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다른 보직은 인사이동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서울청장

은 직위해제가,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직위해제돼 있어서 그 자리만 일단……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김광호 서울청장 직위해제됐을 때 그때는 조지호 치안정감을 임명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때도 아마 단수로 했을 겁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7명 치안정감이 꼭 차 있어 가지고 전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 놓고 이번에는 왜 승진 인사를 하는 거냐는 말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번에는 일단 김봉식 직위해제 청장이 아직 티오가 남아 있어서 당장 승진 내정만 한 겁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전보 인사를 할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승진 인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1년 6개월 만에 충청에서 치안정감으로 고속 승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승진 내정은 서울청은 다른 청과 달리 그 밑에 치안감이 3명,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안감으로 사실은 지휘하는 것이 좀 버겁다고 생각을 하고 승진 내정을 해서 치안감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우리 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웅색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것은 결국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 엄격하게 경찰공무원법에 그리고 경찰법에 그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복수로 추천해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협의 거친 거예요, 이것?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복수로 하기는 하지만 단수로 한 예도 가끔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가끔 있는 게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든한 차례가 있었는데 딱 세 차례 빼놓고는 단수 추천이 없었어요. 다 복수 추천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엄중한 상황이……

○**이해식 위원** 내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소규모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해식 위원**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직부터 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인사는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시행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박현수 직무대리 앞으로 나오세요.

직무대리께서는 작년 12월 19일 그리고 올해 2월 15일, 두 차례 내란중요임무중사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지난 2월 14일에는 군인권센터에서 내란중요임무중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이 됐어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언제든지 주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고 향후 특검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 대상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저는……

○이해식 위원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 날, 12월 3일 날 오전에 조지호 청장과 통화를 했고 계엄 선포 직후에 두 차례 통화를 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경비국장과 11시 7분, 11시 35분에 통화를 했고 강상문 영등포서장—다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예요—0시 41분에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과도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조지호 청장과 또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날 당일 날.

대체로 국조위에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답변들을 주로 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란 사태가 어찌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경찰국장인 분을 승진 임명을 시켜 가지고 서울청장으로 발령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짐작 가는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만약에 파면이 결정된다면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까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일각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자기도 인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겸허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선거의 엄정중립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대선 상황이 전개가 되면 선거의 엄정중립을 지킬 수가 있겠냐고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엄정한 대선 상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서울청은 지금 윤상현,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배후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한길 강사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현재 폭동 모의와 관련해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의 카페, 문자 테러 사건도 지금 다루고 있고 촛불행동과 관련된 수사도 하고 있고.

내란과 관련된 핵심적인 수사를 지금 서울청에서 하고 있어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일련의 수사 사항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무마될 것이다, 수사 제대로 못 할 것이다,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 사무를 다룰 선거 수사라든가 선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할 것이다, 매우 편파적

일 것이다.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무대리께서 정치경찰이고 내란경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무대리께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무대리한테도 저는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엄과 관련해서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정동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에서 지난 14일 복합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건 때문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조의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소방관을 비롯한 화재 진압과 생존자 구조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방 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화재예방 교육 및 대피훈련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는 비극적인 화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사망 부상자와 유가족분들께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과 빈틈 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회도 사고 관련 법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정동만 위원** 직무대행님인데 차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매주 반복되는 집회·시위 때문에 일선 경찰관과 지휘부 모두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현재 피로도가 상당한데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집회·시위뿐만 아니고 민생치안을 위해서도 빨리 경찰 지휘체계가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런데 야당은 당연히 해야 할 인사 가지고 또다시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야당 주장과 같이 박현수 서울청장직무대행이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서 현재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게 전부고 혐의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자세한 내용은 현재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번 계엄 관련 수사 국수본이 전담하고 있는데 서울청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계엄 관련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서울청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정동만 위원 이미 현직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이 되어서 구속까지 되었는데 야당은 또다시 해괴한 논리를 통해서 이번에 임명된 서울청장직무대행도 계엄에 관여를 했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국회가 인사청문 권한을 가진 경찰청장이 아니고 서울청장 임명권을 가지고 이렇게 현안질의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과거 행안위에서는 가끔 경찰 인사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트집 잡고 이제는 서울청장 인사에도 입법부가 압박을 가합니다. 일선 경찰서장 인사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지요?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번 서울청장 인사, 지난해부터 이어진 치안 공백뿐만 아니고 경찰 내부 인사적체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하위직 인사까지 다 연결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시행은 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지난 4년간 경정 이하 승진자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한 9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추산되다가 작년에만 유독 5000여 명에 불과할 만큼 인사적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차장님,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우리가 침탐형으로 돼 있어 상위직이 굉장히 적고 하위직이 많은 구조가 돼 있어서 인사적체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은 많습니다. 최대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청 단위에서도 직급 조정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서울청장 인사가 치안 공백 해결과 지금 현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고 최소한의 권한 행사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최소한의 인사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지금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 임명을 강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야

당이 두 달 넘는 치안 공백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행사한 경찰 인사는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인사는 빨리 임명해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는 왜 임명했냐고 난리입니다. 절차와 원칙에 맞게 진행된 행정부의 인사마저 국회의 힘의 논리 가지고 집행하는 행위,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인사검증 대상자는 인사검증 기관, 항목 또 면담 여부 등 검증 절차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여기에 계신 장관직무대행 또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소방청장님 모두 해당 서약서 작성했지요? 안 한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다 했지요, 서약서에?

국회의 공식적인 청문회 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경우에 자신의 인사검증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충돌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인사검증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 시작 시기나 진행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자료제출 요구만 받을 뿐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사 대상자에게 인사검증 시작 시기나 절차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인사 졸속, 부실이라고 주장하려면 도덕적, 업무적 결함을 찾아낸 뒤에 검증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검증 과정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국회가 인사권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찰은 내란에는 가담을 했지만 그러나 그 진압 과정에서는 주도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래서 국민들도 좋은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번 인사로 다시 스스로 비판 여론을 자초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인사 대상자가 4명 있고 그런데요. 인사 당사자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이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만 그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 승진을 미끼로 또 보직을 미끼로 권력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내란 과정에서도 광종근 특

전사령관 만년 투 스타로 끝날 사람을 쓰리 스타 달아 주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었다, 콕쫌 사령관이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동 대행 차관님, 이번 인사를 이호영 차장님하고 두 분이서 상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최초로 이야기를 한 분은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서울경찰청장이 계속 공식이어서 필요성을 계속 느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호영 대행님은 대행께서 스스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먼저 인사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야기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상식 위원 인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기동 차관님이나 이호영 차장님께 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순차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이 경찰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정진석 대통령실장, 김주현 민정실장,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이 세 분한테서 혹시 전화를 받은 분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외부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없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저도 그쪽에서 전화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대통령 이 세 분이 다 대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치안정감이나 치안감 인사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 최상목 대행이 저는 경찰 인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켰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여기 계시는 두 분 대행님이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인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특정 인사가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행님, 혹시 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많이 나왔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특정 인사 문제는 없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 부분 한국일보에도 크게 나왔는데요. 그 사람의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입니다, 이원모. 이분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인사검증을 총괄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식적으로도 인사 라인에 개입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원모 비서관이 어떤 분이냐, 2022년 6월 이번 윤석열 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치안정감 승진자 대상자 6명을 개별적으로 면담·면접을 했습니다. 그것은 차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 자리에 동석을 했다고 이원모는 부인했지만 이상민 장관은 인정했습

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인정한 날짜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상식 위원 예,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당시 인사비서관이었고요.

○이상식 위원 인사비서관이었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사전에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동석을 했다,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아직까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까지 된 그런 상태인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리인 이원모가 이런 분이고, 그런데 이원모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원모가 지난 총선에서 용인갑 지역에 전략 공천이 됐습니니다. 기존에 활동하던 국민의힘 후보들 7명을 다 누르고 낙하산으로 단수 공천이 됐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했다는 김대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니다. 이걸 저는 객관적인 팩트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고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정권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집권층이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최후의 만찬을 열어 가지고 자기들이 승진시켜 주고 싶은 사람을 승진시켜 주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승진 대상자 명단까지 지금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래서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 인사에는 경찰의 입김이, 의지가 관철될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 이제 곧 경무관, 총경, 경정 이하 인사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곧 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앞으로 인사 여건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21일 시험 공고 안 됐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21일 날, 20일……

○이상식 위원 공고하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상식 위원 그러면 경정 이하 인사는 그 전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정 이하는 그때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총경하고 경무관 인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아니지만 인사 여건이나 상황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직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찰의 의지,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를 다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대행님, 자신 있습니까?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차단하고 스스로 경찰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관철할 자신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소신껏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명태균 녹취록에서 김상민 검사라는 이분을 어디, 경남의 어느 지역구에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요청을 했다는 그런 녹취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위직으로 갈수록…… 경무관, 총경은 하위직도 아니지만 그 밑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런 집요한 집권층의 요구나 압력이 계속될 걸로 보이거든요.

대행님, 하여튼 오늘내일 중에 만약에 경정 이하 인사가 있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행께서 특별하게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를 하라는 그런 일제 지시나 이런 걸 한번 하달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인사는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 입장에서 또 조직의 어떤 안정화 입장에서 판단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역대 정권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인사가 잘못되면 또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봤다고 하는 당사자들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든지 그걸 만회하려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악순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최대한 공정을 기해 달라, 차장님, 대행님한테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청장직무대행하고 장관직무대행하고 역할을 좀 조정한 겁니까? 애시당초에는 청장직무대행 본인이 추천하지 않은 것처럼 저한테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장관직무대행은 본인이 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야기를, 서로 역할 분담을 했네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닙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청장직무대행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판단한 겁니다, 제가.

○위원장 신정훈 이번에 지금 국회가, 지금 위원님들이 무슨 뜻으로 질문하는가 아시지요, 차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직무대행도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번 서울청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도 치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국의 시위나 집회가 집중되는……

○위원장 신정훈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 내란에 가장 주도적으로 가담한 경찰부대, 그 지휘관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내란의 주동자가 된 그 부대의 기관장을 지금 우리가 다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사 매꾸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인사가 계속될 것 같아서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정신이라면, 일말의 책임이라도 있다면 절대 이런 일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13만 경찰의 명예가 추락했고 경찰의 역사상 가장 아픈 역사가 될 거예요. 반성하고 자성하고 그걸 치유하는 그런 인사가 돼야지요, 최소한 서울청장만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번 인사가 그런 인사가 됐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인사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여러 가지 의견이 아니지요. 반성하고 성찰하는 인사가 돼야지요. 이 건 완전히 역행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전혀 반성이 없는 인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회의를 연 거예요. 당사자들 출석 않고 저렇게 개기는 이유가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추호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옥중 인사다, 내란 인사다, 선거 인사다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꼬끼리 뒀다리 만지기 이런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 직무대행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경찰청 누가 결정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또 장관직무대행하고……

○위원장 신정훈 언제 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말씀드린 1월 22일경쯤에……

○위원장 신정훈 1월 22일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경쯤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경찰 인사의 필요성을 본인이 결정했다 그건 좋아요. 박현수 경찰국장을 이렇게 승진시켜야 되겠다 추천한 사람은 누구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인사 문제는 대외적으로……

○위원장 신정훈 그건 본인이 안 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협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그동안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직무대행도 안 하고 경찰청장직무대행도 안 했어요. 누가 했냐는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 직무대행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보세요.

2차 한남동 체포영장 집행 직후에 여당의 5선 국회의원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최현석 서울청장직무대행 그리고 국수본 이놈들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어요.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그게 말씀하신 설날 직전입니다, 15일 날, 16일 날. 체포영장 집행 되고 나서 여당이 그런 입장을 밝히고 또 공공연히 그렇게 주장했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아니라요, 우리 역사상 내란이라는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니, 자주 일어났습니까? 경찰의 치욕적인 역사를 저는 청장직무대행께서 잘 수습해 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국수본이 나름대로 내란 수사에서 엄정하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사가 된 이유는 그런 기조를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불을 보듯이 뻗습니다. 이 인사가 왜 필요합니까? 본인한테도 경찰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인사로 뒤집기 하겠다고요?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배반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먼저 경찰청장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조승환 위원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잘……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설행 계엄법상이나 헌법상 구성요건적인 어떤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을 내란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인사검증이, 특히 정무직이 아닌 인사검증이 국회 본연의 업무다라고

오늘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국회에서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무직인 경우에 별도의 법에 따라서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청문 과정을 통해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은 행정부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습니다. 인사검증의 업무는 국회…… 특히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검증의 업무는 행정부의 업무이고 이 검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관련해서……

지금 서울청 차장님들 나오셨어요, 청장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차장……

○**조승환 위원** 서울청 차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박종섭 차장 나왔습니다.

○**조승환 위원** 나왔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생활안전차장 박종섭** 예, 생활안전차장……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증인과 관련해서 기관증인이라 그래 가지고서……

저는 사실 지방청장도 해 봤고 공공기관장도 해 봤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불러 올 때는 항상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는 지방청장 빠져라, 어떤 경우에는 지방청장 들어가라, 어떤 경우에는 공공기관장 업무보고 때 증인으로 나와라, 들어가라 이게 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결정돼서 저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관증인은 상황에 따라서,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부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서울청장직무대리, 나와 주세요.

그리고 같이 청장직무대행께도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고속 승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은 3년 6개월 또 어떤 위원님은 1년 6개월 만에 총경에서부터 치안정감까지 승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현수 직무대리, 총경 언제 되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2016년도에 됐습니다.

○**조승환 위원** 2016년 12월에 되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경무관 언제 되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2023년 1월 달에 됐습니다.

○**조승환 위원** 7년 1개월 걸렸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경무관에서 치안감, 10개월 걸렸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경무관부터는 최저 승진 소요연한이 없습니다. 경무관에서 치안감 승진 내역을 보면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당시 1.4년, 1.5년 등으로 다 승진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치안정감은 아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승진 내정자 신분입니다.

○조승환 위원 대행님, 지금 박현수 치안감이 치안정감이 언제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로서는 한 6월쯤에 될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지요. 결국 직위해제된 사람이 6개월 이상 됐어야, 이번에 특별한 경우에는 3개월로 줄었는데 이번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 안 되고 6개월이 돼야 치안정감이 되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법 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이 되는 데 1년, 최소 1년 4개월이 걸리는 셈이 되는 거지요, 2023년 10월에서 2025년 6월이 되는 거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지난 정부에서 승진한, 지난 정부에서 치안감이 되면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사례들을 볼 것 같으면—여기 PPT 띄워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마는—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되고 7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지방경찰청장 하고 있는 우철문 청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정부 2021년 7월에 승진이 돼서 2022년 6월 달에 승진이 됩니다. 11개월 만에 승진이 됩니다.

치안감·치안정감 인사라는 것은 결국 소요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총경부터 시작을 하면 거의 10년이 걸렸고 또 경무관에서부터 치안정감까지를 하더라도 통상의 예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승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인사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인사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대행님이나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서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으로, 저는 해경 인사 관련해서 경찰법 적용을 받아서 해 봅니다마는 장관한테 올라온……

사전에 협의는 거칩니다. 사전에 협의는 거치는데 장관한테 청장이 추천하는 것은 1인을 추천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이번에는 단수였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번뿐만이 아니라 항상 장관한테 청장……

물론 사전에 협의는 분명히 거칩니다. 그런데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관한테 올라오는 인원은 단수입니다. 그것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습니다. 추천돼서 오는 것은 분명히 단수입니다.

이상 추가질의 이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시간 멈춰 주시고 박현수 서울청장직무대리님 나와 주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서울청장직무대리입니다.

○용혜인 위원 박현수 직무대행님, 불과 사흘 전에 참고인 조사 받으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언제든 피의자 전환이 될 수 있는 내란죄 수사 대상입니다. 서울청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지금 박현수 직무대리의 결백함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들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거고 수도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청장이 두 번 연속으로 내란죄 혐의로 입건돼서 공석이 될 위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무대리께서 내란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출입 통제하면 안 된 다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혹은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 사실 없으시지요?

한 번도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 직무대리 본인에게 명령했던 상관들은 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상민 장관 지금까지도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하나같이 거짓 증언을 하고 혐의를 감추고 있으니까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추가 혐의가 드러나고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박현수 직무대리도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다 끝나고 혐의를 벗은 이후에 승진을 하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언제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피의자로 전환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직무대행이 서울청장을 맡는 게 맞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엄에 관여한 바 없고 장관이나 청장으로부터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고요.

언제든지 피의자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청장 자리로 가서 두 번 연속으로 내란죄 혐의로 서울청장이 공석이 되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무대리 말고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위로 치안정감 6명이나 있잖아요. 서울청장이 필요하면 그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굳이 직무대행 본인이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무대리 1명 승진하겠다고 서울청장이 두 번 연속으로 내란죄 혐의로 교체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서울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이 더군다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선동 혐의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의 내란 수사를 맡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 수사 대상이 서울청장으로 있으면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누가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13만 경찰 조직과 서울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본인이 거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더욱더 서울청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철저하게 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직무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이호영 차장님께 마저 여쭙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옹혜인 위원** 박현수 서울청장 추천, 본인이 직접 판단한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추천이라는 과정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옹혜인 위원** 아니, 본인이 직접 판단한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같이 협의해서 판단한 겁니다.

○**옹혜인 위원** 박현수 직무대리의 어떤 면이 서울청장에 적합하길래 치안정감 6명을 다 건너뛰고 단수 추천하고 5시간 37분 만에 졸속 검증까지 감행하면서 임명을 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협의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옹혜인 위원** 최소한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내란 연루 의혹이 없어야 서울청장,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참고인 조사한 것만 가지고……

○**옹혜인 위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건 서울청장이 두 번 연속 내란죄로 공석이 되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서울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리스크를 왜 감수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충분히 책임 치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옹혜인 위원** 기존의 치안정감 중에 내란 수사 안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고인 조사 안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오문교, 김도형, 김수환 이 치안정감들보다 박현수 직무대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폭 인사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본인의 역량이나 리더십이나……

○**옹혜인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치안정감 내에서 서울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맞겠지요. 소폭 인사, 큰 변동 없는 인사를 안정을 위해 추구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다른 지방청도……

○**옹혜인 위원** 심지어 오문교 치안정감은 김봉식 서울청장 임명할 때 후보로 추천돼서 이미 인사검증도 거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빠르게 서울청장을 임명해야 된다면 기존의 후보자였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오문교 치안정감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게 있어서 배치하기 어려웠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러면 다른 치안정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차피 그쪽에는 각 지방청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보직을 옮기지 않는 것이……

○**옹혜인 위원** 각 지방청을 담당하고 있지요. 모두가 다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사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란에 대한 혐의와 의혹이 있는 후보를 임명 강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박현수 직무대리가 서울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추천한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는데 어떤 국민과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대로 인사검증하지 못했다. 윗선에서 시키니까 임명을 했는데 좀 국회나 국민들의 우려들을 들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 박현수 직무대리가 책임 치안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옹혜인 위원** 나중에 피의자 전환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확실히……

○**옹혜인 위원** 서울청장으로 있으니까 피의자 전환 안 되도록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니실 거라고 믿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공정하게 수사해서……

○**옹혜인 위원** 그렇다면 피의자 전환되면 그때 그 공백과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실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때는 바로 인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 부담을 왜 서울시민들이 져야 하나라고 여쭙보는 거예요, 계속.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부담이 아니고 참고인 조사한 사람들 모두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옹혜인 위원** 부담이지요.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청장, 치안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서울청장이 두 번 연속으로 바뀌어 나가서 공백이 되는데 부담이지요, 당연히.

제가 한 달 전에 내란에 가담했던 경찰 간부들 인사조치 하라고 행안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진우 경비부장, 임경우 수사부장, 강상문 영등포서장 직무배제 안 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경무관 인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경찰 조직의 수장들이 내란에 연루돼서 잡혀간 지가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경찰 조직을 쇠신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내란에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승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경찰이 내란 이후에 자정하고 쇠신했다,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필요한 인사조치는 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무리하게 서울청장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일단 직무배제시키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직무배제 조치들은 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경찰 인사가 상위직부터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를 소폭으로나마 시행을 했던 거고요.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리더십 이런 것을 보고서 인사를 하는 거지 참고인 조사 받은 것 가지고 배제한다는 거 이런 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 오후에 마저, 추가질의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시간 멈춰 주시고 박현수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해서 본인은 계엄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요. 박 국장님은 경찰이지않아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가장 억울함을 밝히기 용이한 수단이 통화기록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박 국장에게 비상계엄 전후로 공인들, 즉 공직자들과의 통화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부하셨지요? 거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수사기관에는 제가……

○**윤건영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인원이 아니라 공직자와의 전화 통화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아 니,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제출하셔야지요. 왜 여기서 말로만 자신 있고 당당하다라고 하 시고 통화기록 하나 제출을 못 합니까? 내란에 관여된 게 없는 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입증하는 겁니다.

들어가고요.

시간 멈춰 주세요.

이호영 차장께 여쭙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윤건영 위원** 고기동 차관님도 같이 여쭙겠는데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추천은 하지 않았고 혐의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간명 하게 물어볼게요. 추천한 건 아닌 거지요, 그러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혐의를 해서 추천이 되는 겁니다.

○윤건영 위원 잠깐만 제가 다시 질문 정리해 볼게요.

박현수 국장과 치안감으로 승진한 세 사람을 추천하셨습니까 아니면 협의하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요……

○윤건영 위원 본인이 협의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협의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그전데요 위원님도 전에 해 보셔서 알지만 사전에 여러 명을 다 갖다 놓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내정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윤건영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예전에 경찰 인사를 해 봤던 사람으로 여쭙겠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 이번 인사가 통상적인 인사에 부합한다라고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통상적인 절차대로 사전 협의하고 추천하고……

○윤건영 위원 아니, 말로 흐트러뜨리지 마시고요, 차장님.

통상적인 인사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신 있게 그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절차상은…… 왜 이러세요.

자, 그러면 또 여쭙게요. 인사권자의 의중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앞서 용산 대통령실의 그 누구와는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장관……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저 질의 안 했어요. 치안정감 인사는 대통령 임명직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중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윤건영 위원 자, 됐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윤건영 위원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중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 직무대행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권한대행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요, 그러면 사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부터는 어떠한 언질도 받은 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사람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경찰청 차장님, 온전히 경찰청에서 순전히 박현수 그리고 이외의 치안감 승진자 세 사람을 추천한 거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건영 위원 아니요,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하세요. ‘예, 아니요’로 답변이 안 되는 사안 아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선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선후의 차이가 아니라……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데 선후를, 앞의 맥락을 자르고 뒤엎것만 물어보시니까……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차장님, 차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찰 인사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방금 행안부차관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명권자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이 오롯이 치안정감 한 명, 치안정감 세 사람을 추천했다 이게 맞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제가 추천한 건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럼 제가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이진. 이번 인사가 박제될 거니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에 남기시려면 앞의 맥락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하시고 뒤에 추천한 것만 갖고 따지시니까……

○윤건영 위원 자, 좋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윤건영 위원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차장님, 제가 묻잖아요.

박현수 국장과 치안감 승진자 세 사람을 차장님이 추천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최종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최종적으로…… 왜 자꾸 말꼬리를 돌립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전체를 놓고……

○윤건영 위원 그 사전에 협의한 사람이 고기동 차관이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장관직무대행 사전 협의되고 장관직무대행께서……

○윤건영 위원 잠시 제 말씀 들으세요.

사전에 협의한 사람이 고기동 차관이고 고기동 차관은 경찰이 추천한 걸 받았다는 거잖아요. 고기동 차관이 무슨 경찰 임무를 압니까, 경찰 요원들을?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여러 명을……

○윤건영 위원 치안감 인사를 어떻게 알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차장님이 다 하신 거네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건영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 아닙니다.

차장님, 이번 인사 다 하신 것 맞아요?

자, 그러면 왜 이번 인사가 잘못됐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게 정부 인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다, 차장님.

이번 인사가 왜 잘못됐는지 이야기할까요? 서울청장을 임명할 때 지방청장을 꺾지 않

고 서울청장이 된 사례가 아주 드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역대급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한두 명 이외에는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많지는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윤건영 위원 치안정감 티오가 다 찾을 때 승진 발표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찾으려면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명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전에 뭐…… 조금은 있습니다, 승진에서.

○윤건영 위원 아주 예외적으로 찾는 겁니다.

치안감 후보 그 세 사람을 뽑는데 용산 출신을 2명 넣는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뭐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정부 인사가 아니라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문제시 삼는 것은 정말 예외가 예외가 예외가 예외가 모인 이번 인사라는 겁니다. 그 인사를 왜 차장이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인사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

○윤건영 위원 본인이 추천했다면서 왜 왈가왈부를 안 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최종적으로……

○윤건영 위원 잠시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무런 인사지침도 준 적이 없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장관직무대행하고만 협의를 한 거고요.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장관직무대행으로 올라간 게 이호영 차장이 올린 거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 이번 인사를 책임지고 올리신 거라고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경무관 인사하고 총경 인사도 다 났다라는 소문이 돌니다. 그 소문 들어 보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걸 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경찰 수장이시고 경찰청 주변에서는 총경 인사 명단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역으로 여쭙볼게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는 박00 행정관 승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름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승진 연차는 됩니다.

○윤건영 위원 승진시킬 거지요? 승진시켜서 어디로 보낼 것까지 지금 소문 다 났습니다. 소문이 아니고요 자리를 어디로 간다는 것까지 다 나 있습니다. 이러니 인사를 못 믿

는 거예요. 이게 무슨 통상적인 인사고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지금 총경, 경무관 인사를 처음 듣는……

○윤건영 위원 자, 그러면 오늘 경찰청 경정 인사 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정 이하만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요. 경무관하고 총경 인사하고 경정 인사 하는 게 순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서를 바꿨어요. 이번 인사만큼 예외가 예외가 예외가 계속 파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행정관, 승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왜 못 드립니까? 이 양반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시중에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서 경찰 인사에 전횡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경찰청 주변에 가면 이 소문 다 압니다. 경찰청 총경급 이상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승진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 당사자가 여기에 없는 상황에서 승진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요. 제가 경찰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 수장인 경찰청 차장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차장이 왜 모르세요, 경찰청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사인데? 그리고 실제로 총경이 승진돼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자리까지 나돌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상은 아니지만요. 저도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윤건영 위원 뭘 처음 듣습니까? 제가 그러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갈 자리까지 정해졌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윤건영 위원 갈 자리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지……

○윤건영 위원 궁금한 게 아니라 차장님이 책임 못 지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안감 세 사람, 박현수 국장 승진자까지 해서 네 사람을 차장이 이번에 승진시켰다고 하니, 오후 질의에서 또 물을 텐데요. 이걸 역사에 박제되고 기록되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총경 인사 보직은 경무관……

○윤건영 위원 총경 인사 보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그러니까 보직은 경찰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보직이 지금 어디 정해졌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총경 이상 승진부터 경무관 승진까지 정부인사로 가는 것이지, 보직만큼은 경찰청장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까지도 정

해졌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윤건영 위원** 평소의 차장님의 그런 답변이었으면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 비상계엄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받는 그런 사람을 승진시켜 놓고 이야기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나중에 가서 탄소리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로지 주제 하나가, 지금 경찰청 소폭 인사와 관련된 것에 집중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안위 출석해서 답변했던 증인들의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말과 실제 또 다른 진실이 나온 것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답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무조건 거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위원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으면 정말 진실을 말하는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의 질의가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지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요. 저것을 갖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도 보니까 앞으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집회·시위 관리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요. 불법 폭력시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안정된 집회·시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정성·형평성, 이중 잣대가 아닌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집회·시위에 대응을 할 때 그야말로 소수의 일반 국민의 집회든 아니면 정치 세력화된 대규모 집단 세력의 집회·시위든 보수의 집회든 진보의 집회든 그리고 국회의원이 참석한 집회든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집회든 모두 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건전하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는 첩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행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청장 등 몇 분의 인사와 관련

해서 간단하게 저도 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공직에서 경찰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또 경찰 인사를 해 봤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청장이 세 분의 치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외되고 세 번째 3순위에 있는 차장이 그동안 직무대행을 해 왔고 그리고 치안 수요 면에 있어 가지고 누구나 동의하듯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을 조속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지금 치안정감이 여섯 분 있지만 그분들 갖다가 서울청장을, 이동을 통해서 청장 자리를 임명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폭의 인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는 이번에 소폭의 승진자를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보는데 청장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새로 임명된 박현수 직대를 내란 동조자 또는 혐의가 짙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박현수 대행께서는 참고인 조사를 두 번 받았다고 그랬지요, 청장대행?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참고인 두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어디 가서 받았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국수본부장 휘하에 있는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도 아주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구속한 곳이 바로 국수본이고. 국수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동료 경찰이었다 그래 가지고 사건 처리에 있어서 조금 유하게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들을 제가 봤을 때는 다 벗었다고도 보는데 청장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수본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란과 연결시켜 가지고 보직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국수본부장마저 그 직에서 내려놓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까지 당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라도 지금 박현수 서울청장직대 임명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어차피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지금 곧 고위직 인사하고 하위직 인사 그다음에 인사이동까지 다 하실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지금 서장 임기를 대부분 1년 단위로 돌리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1년 단위로 보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렇게 돌리는 이유가, 서장 임기를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청렴이나 부정부패, 향토 세력과의 토착 문제, 유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1년 단위로 돌렸던 거고요. 최대 1년 6개월 또는 2년, 가끔 안정적으로 관리할 경우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지역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기관장, 경찰서장의 임기가 1년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이 문제는 저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직 내의 순환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1년 단위로 해도 좋겠지만 지역민의 입장에서 경찰 인사를 한다 그러면 1년은 너무 짧고 한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는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대행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차장님, 인사 관련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계엄군이 국회 단전하는 게, 6분간 단전하는 게 지금 아마 경찰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한병도 위원 경찰에 아마 수사 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전뿐만이 아니고 호스로 문을 다 봉쇄한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것 상황들을 굉장히 중히 파악을 하고 수사가 제대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국수본에서 철저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병도 위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사와 관련해서 절차의 문제, 너무 빨리 승진,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즉 경찰 인사도 결국은 국민 공감대인 거잖아요, 내부만의 문제로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장관후보자가 되면 국민의 신뢰도, 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정을, 그 부처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경찰의 신뢰가 그렇게 깨진 줄 아십니까, 첫 단추가? 여러분, 여기 경찰분들 다 계셨겠지만 그때 청장님하고 서울청장님 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TV 보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설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우리들 앞에서 거짓말할 거라고 누구 한 명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단지 얼마 있다가, 세상에 저희 위원들끼리 모여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청장님이 적어도 우리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솔직히 여야 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 기반 자체가 깨진 겁니다. 그건 위원들뿐만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뢰가, TV 보고 알았는데 이렇게 깊이 관여돼 있다고, 며칠 후에 다 체포되고 수사받고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의 본질은 뭐냐? 빨리 승진하고 절차 문제 있지만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즉 이 계엄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국민들이 경찰을 현재 어떻게 보고 있나,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상시보다 더 조심해야지요. 절차를 거쳤으니까 문제 없다?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현재 쌍방의 주장이 있습니다. 아까 나오셔서 ‘나는 참고인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단전·단수 관련해 가지고요, 행안부장관님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오늘 압수수색 다 들어갔지요, 사무실에.

소방청장님, 지금 집과 사무실 다 압수수색 들어갔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사무실이 압수수색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병도 위원 현재 압수수색받고 있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한병도 위원 왜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기본 저변에는 계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박현수 국장은 의혹 제기를 한 건 청장과 수발신을 세 차례나 했고요, 15초, 42초, 50초. 그리고 그 바쁜 때, 핵심적인 시간에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를 했지요. 그리고 답변은 ‘상황 문의를 했다’. 영등포서장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게 안부 나눴다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겠지요.

그다음에 또 경비국장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통제하는 핵심 멤버들하고 다 통화한 것 아닙니까? 12월 3일 날 11시 10분경 그다음에 11시 35분경 전화를 했잖아요, 경비국장한테. 그리고 또 1시 16분경에 행안부장관한테 통화를 했잖아요. 즉 본청장, 서장, 경비국장, 행안부장관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문제 제기를 안습니까, 그것도 계엄 그 상황 안에.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한 거지요. 즉 국민 또한 이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이런 때 인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차에 문제 없다? 이분들은 이런 때에는 더 조심해야지요. 그게 국민들이 최소한 경찰을 보는, 신뢰 떨어진…… 공감 능력이 있다면 더 진중했어야지요.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고 그러면 정말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군하고 경찰이 이번 계엄에 관여했잖아요.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왜 인지를 못 합니까? 왜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러면 오늘 식의 답변을 계속하십시오. 절차에 문제 없었다,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할까요? 이런 때에는 설령 할 수 있었더라도 상황이 이러니까 좀 더 진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현재 국

민적 정서와 맞는 인사지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새기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TV를 봤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사무총장님 지금 정말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진실과 팩트가 있고 증거가 존재해도, 설득을 하려 해도 대화가 안 되니 딱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즘 TV에 나오는 사무총장님 보면 표정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 힘든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 쪽에서요,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의도적으로 현재의 신뢰를 훼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선거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가 그때 현재를 봤을 때는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질문 내용이 21대 국선에 관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병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변호인들은 선관위 채용 비리나 투개표 관리상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을 들면서 자꾸 부정선거로 연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무효소송은 모두 소 취하, 기각, 각하되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한병도 위원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대법원조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를 못 하고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제가 좀 이따 5분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갑 김성희입니다.

제가 경찰청장직무대행님께 제보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김성희 위원 노상원 씨 아시지요? 작년 9월부터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까지 스물두 번 김용현 장관 만나고 계엄 전 나흘간은 매일같이 공관 드나들면서 계엄의 배후 설계자로 의심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수사 잘되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치가 됐기 때문에……

○**김성희 위원** 수첩에 수거, 폭파, 사살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망상병 환자인데 이런 사람을 중용해서 일을 하는 계엄군의 엉터리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결과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노상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계엄사 합수부 산하 제2수사단 이걸 자기가 배후에서 이끌면서 선관위 직원들 체포하고 수사하겠다고 이런 얘기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진 않았는데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호응을 요구하는 게……

11월 17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상원이 문상호, 정성욱 등을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죽이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 잘 준비해 뒤라’. 정성욱은 당시에 정보사 예하 100여단의 부대장이었고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고 몽둥이랑 케이블타이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으로 수사를 해 가지고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망상을 실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 임무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사를 통한 제2수사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려고 했는지를 경찰이 잘 수사하는 것이 이번 내란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방금 100여단 언급을 했는데요, 정보사 100여단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제2수사단원으로 뽑아 두었던 HID 소속 36명 대기시켰던 곳도 판교의 100여단 사무실이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신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전반적인 흐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단이 어떻게 이런……

○**김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100여단인데, 저희가 정보사 여단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여단이 한 3000~5000명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되겠지요.

노상원하고 계엄 당일 롯데리아에서 만났던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제안받았던 구삼희 제2기갑여단장이 대기하고 있던 곳도 100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선관위와 관련된, 선관위 체포 및 수사와 관련된 인원들이 다 100여단으로 꾸역꾸역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회동에도 참석하고 노상원·문상호의 지시를 받아서 제2수사단이 될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제2수사단의 3수사대장을 맡을 것으로 되어 있던 정보사의 정성욱 대령,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사 100여단 예하 부대의 부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또 100여단입니다. 100여단이 계속 나오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사 100여단이 12월 2일에 경찰청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들고도 있습니다, 이 공문.

내용 보시면요, 맨 위에 있는 마크 보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정보사 마크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대명은 보안 문제기 때문에 가렸습니다. 0000부대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100여단의 부대 번호인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보사 100여단이 경찰에게 폴조회 권한을 복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폴조회가 뭐지요? 폴조회 아시지요? 모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폴조회가 우리 시스템 조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희 위원 그렇지요.

폴조회라는 것은 주민, 범죄·수사 경력, 수배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공안, 신원조회, 부정계좌 등 자료를 관리하는 경찰망 서비스를 뜻하는데 이 폴조회를 열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범죄 경력, 주민 정보 등 주로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기능이 없는 정보사에는 오직 딱 한 군데, 이 100여단 소속의 딱 한 개 부서에서만 정보 소스 신뢰도 검증용으로 권한을 갖고 있던 건데, 이것 안 써서 권한이 없어졌는데 하필이면 12월 2일에 100여단이 경찰청에 복구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경찰이 기가 막히게 그대로 복구를 해 줍니다.

그런데 12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상원이, 문상호—김봉규는 정보사 심문단장이었지요—정성욱 등을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선관위 서버실에 선발대로 보낼 10명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 관련 사항 이행 점검을 하고 이들이 폴조회가 안 되는 것을 이때 확인한 것으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12월 2일에 폴조회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필이면 계엄 전날에 노상원하고 문상호가 요원을 선발해서 계엄 이후 선관위에 파견하고 보낼 사람들 했던 바로 그날 이걸 조회했다는 것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있었던 일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폴조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를 의심해 보겠습니다.

그날 선관위에 들고 다녔던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저것 기억나시지요, 선관위 조직도. 저것 왜 들고 다녔느냐? 우리가 선관위 사무총장님께도 여쭙봤었어요. 청장님께도 여쭙봤었습니다. 도대체 저 조직도는 왜 들고 다녔을까. 그런데 이 폴조회랑 맞춰 보면 나옵니다. 저 조직도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갖고 폴조회에서 조회를 하면 주민 관련된 정보와 범죄·수사 경력, 수배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사 100여단이 파악을 할 수 있게, 즉 선관위원, 선관위 직원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쓴 것이 아닌가, 정말 무섭지요. 왜냐하면 정보사 소속의 심문단장이었던 김봉규하고 예하 부대 부대장이었던 정성욱이 같이 모의를 했기 때문에 40명 인원을 선발해서 판교에 모여 있는 가운데 딱 그날 폴조회가 열리고 여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100여단 소속 부서가 11월에 정보사 조직개편 할 때 인원도 증원이, 제가 이것은 몇 명이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약간 명에서 2배 가까운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딱 이때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100여단이 HID도 예하에 두고 있고 각종 공작, 특수임무 등을 수행하는 곳인데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 쪽에서는 계속 케이블타이냐 야구방망이냐 이런 것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족치면 뭘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던 그의 망상과 연결시켜 보면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단한 범죄로 뺏어 나갈 뻔했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처음 듣는데요, 국수본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포함시켜서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것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경북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이만희 위원 대행님, 이번 인사를 둘러싸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꼭 필요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단은 서울청장의 공석이 너무 오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인사를 상위직부터 하지 않으면 하위직 전보 인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요, 그래서 빨리 서울청장만이라도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사실 다른 치안감이라든지 이런 지방청장급 인사는 작년 8월 달에 또 대규모 있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임기도 짧았고요.

○이만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규모로 6개월 만에 다시 할 이유는 크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의 치안 확보를 위해서 경찰청장의 인사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석만 먼저 메꾸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일부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이번 인사가 내란을 은폐하거나 또는 비호하거나 획책하는 세력과 같이 동조하는 그런 유의 인사라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오직 국민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서울청 책임 치안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박현수 청장대행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치안 현장에 대한 방문도 하셨고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서울경찰이 서울의 치안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제가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경찰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하거나 특별한 것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런 경찰 활동을 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직원들이 지금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이만희 위원** 무엇보다도 현장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또 한 면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민생치안에 큰 구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같이 드립시다.

오늘 직무대행의 인사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들은 이게 하나의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사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도 많이들 하시고 그러신데요. 본인은 지금 이걸 굉장히 강하게, 절대로 내란 관련된 상황에서는 자기 역할이 없었다고 애기를 하시는데 맞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이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이지요, 경찰국장의 역할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기본적으로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법적 권한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인사 업무와 자치경찰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통제라든지 경력의 이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할 입장에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경찰국에서는 치안·경비나 정보·수사와 같은 치안 상황 보고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여러 가지 통신 사실에서 나왔듯이 그때 당시, 비상계엄 당시에 여러 차례, 한 일곱 차례 정도 관련자들과 통화를 한 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때 통화는 왜 하게 되신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원체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었고 하기 때문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국장으로서 기본적인 상황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계자들, 즉 계엄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과 통화를 한 것입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계엄이 발표됐을 때, 그때 당시에 직무대행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저녁식사를 지인들과 하고 22시 10여 분경에 막 집에 도착을 해서 집에 있는 상황에서 계엄 사실을 TV를 통해서 인지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다시 나오신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바로 사무실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단순하게, 지금 직무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내란 업무의 주요 종사자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혐의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실상 집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접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직후 상황을 되돌아보면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조그마한 하나의 의심 사항이 있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리도 같은 얘기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화기록을 지금 여러 가지 앞의 건 제출해서 그 내용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 위원들의 통화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지금까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통화 내역 요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 전혀 계엄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통화기록 제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그럼에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통화 요구가 아니고 전체의 통화 내역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사생활이나 통신비밀 보호 차원에서 제가 제출하는 것이 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간에 하나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는 나름대로 그 잣대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의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실시됐지만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참고인으로, 집에서 계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을 주요 업무 종사자 혐의가 짙다는 쪽으로…… 상황 보고를 받거나 현장에 지시할 권한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상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차장의 내용대로 꼭 필요한 인사, 불가피한 인사를 실시한 상황으로 일단 판단은 되는데 나머지 후속 인사도 계속 다 이루어집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나머지 사항은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모경종 위원 치안정감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치안감 인사 관련해서도 협의 또는 추천하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치안감 이상은 정부 인사입니다. 그래서 협의 후에……

○모경종 위원 추천하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추천을 합니다.

○모경종 위원 오늘 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조정래 치안감 승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보니까 101경비단장 시절에 경찰 85명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생일 파티에 파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런 의혹 또는 그런 정황,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승진을 협의하고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 저는 그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안이, 여기서는 경력만 보낸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정도인가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경종 위원 어쨌든 잘못은 했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부 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박현수 국장님 나오시지요.

아까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말하는 관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이를테면 장관이나 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모경종 위원 지시를 받거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또는 지시 사항을 전달하거나……

○모경종 위원 지시를 전달하거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지시 사항 전달받은 것을 제가 다시, 향후에 그 실행을 한 이후에 다시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계엄 당시, 계엄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계엄 관련된 내용을 들은 적도 없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박현수 국장의 통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언론 등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통화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임정주 경비국장과 통화할 당시에는 제가 막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출근을 할 당시였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제가 임정주 국장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담당하는 국장입니다, 계엄 담당 국장—계엄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본인도 지금 막 출근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해서……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계엄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는 거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계엄 상황을 문의했으나……

○모경종 위원 문의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확인한 바 없습니다.

○모경종 위원 아까 답변하셨는데 경찰국장으로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모경종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경찰국장이 하는 일이 뭘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에 따른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모경종 위원 그다음으로 인사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인사와 자치경찰 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부합합니까? 그게 경찰국장 역할입니까? 경찰국장이 경비국장, 계엄에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그 경비국장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할 내용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안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에게, 그 당시에 전대미문의 계엄이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말인즉슨 계엄 관련된 내용을 이상민 당시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상황에 따라서는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말이 앞뒤가 안 맞기도 합니다. 방금은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일단 아닌 건 인정합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이지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다르게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울경찰, 서울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에 일단 가 계십니다. 인수인계 다 받으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누가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던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제가 인수받은 건 없지만 따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마치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처럼 여러 가지 서울경찰청장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갖는 자리 같기는 하지만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다시 한번 벌어졌을 때 서울경찰청장이었다면, 서울경찰청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셨을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분명한 것은 계엄은……

○모경종 위원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러면 계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본인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를 맡고 있을 때 그런 전대미문의 사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방금 집에서 계엄 사태를 확인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비슷한 대답을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법과 원칙이라는 게, 상관의 지시 또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경종 위원 위법하고 위헌적인 명령을 받지 않는 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다른 질문 드려 보지요.

체포영장 발부는 여러 가지 경찰 업무를 하시다 보면 접하게 되는 상황일 텐데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것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거부를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 집행을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안에서 버티고 안 나올 때 서울경찰청에서도 기동단이 파견됐나요, 기동대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관저 주변에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단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비슷한 상황이 와도 그렇게 계속 대기시킬 건가요, 아니면 서울경찰청은 빠질 건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법과 원칙이라고 대답하시는 게 참 만능 키퍼럼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시피 본인의 지금 현재 자리를 맡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아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잘하셔야지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면 아무도…… 본인에 대해서 의심만 더 쌓여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건 당연한 대답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국민 편입니까, 대통령 편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국민 편에 선다고 대답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오로지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의 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들어가시지요.

고기동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모경종 위원 아까 답변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번 인사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을 논의한 바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모경종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까?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특별히 말씀은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 모경종 위원 왜 안 드린 거지요?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 당시에 박현수 경찰국장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또 위원님들에 대한 소명을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시다.
- 모경종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소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권한대행에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 모경종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번 경찰 인사가 어쨌든 말이 많습니다. 이번 경찰 인사 또는 경찰 인사 과정에서 검증 과정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차피 서울청장을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도덕성……

○박정현 위원 역량은 여러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핵심……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런 걸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역량 검증이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역량과 리더십, 도덕성 이런 걸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고기동 차관님, 어쨌든 직무대행에게 추천을 하셨으니까 고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경찰 인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는 어쨌든 당시 서울 치안이 굉장히 지휘 공백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부지법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제가 생각하는 대답이랑은 다르네요.

저는 이번 경찰 인사검증의 핵심은 내란 연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내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전을 책임지겠습니까? 경찰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편에 서서 경찰 업무를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청장직무대리,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직무대리, 오늘 여러 번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본인은 불법 계엄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항변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박현수 직대의 통화기록을 보면요 끝이끝대로 그 말을 믿기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22시 30분 이후 지금 내란 주요 종사자인 조지호와 세 차례 통화를 했고요. 강상문하고도 통화를 했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도 통화했어요. 이분들은 다 내란의 주요 종사자 또는 공범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나,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압수수색을 받고 있던데요.

당시에 경찰국장 아니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아까 경찰국장이 이상민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인이 계엄이 발생하고 나서 이상민 장관에게 어떻게 보좌를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장관 주재의 상황점검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 상황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장관님……

○박정현 위원 그런데도, 주요 내란에 함께 참여했던 이상민 장관이랑 그런 회의를 했는데 본인은 전혀 불법 계엄 사태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다음 PPT 주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 당시 회의는 공개된 실국장 전체회의였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보면 대국민 담화 직후에 22시 31분, 32분에 이진우, 김봉식, 조지호, 박현수 순으로 통화를 했고요. 이 통화 과정을 보면 국회 봉쇄나 의원 체포를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저는 이 부분과 연관이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조지호 씨랑 세 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이 부분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0시 30분경 윤석열이 특전사에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했고요. 0시 45분경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침탈했습니다. 국회 앞 상황이 TV로 생중계가 됐지요. 그런데 강상문 서장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거기 속기록에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만요, 안부를 묻는 게 아니고 국회 주변 상황을 문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강상문 서장과는 오래간만에 통화를 하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있었지 안부를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경찰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런 안부나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정현 위원 됐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습니다.

○박정현 위원 박현수 서울청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참고인 조사 받았고 지금 군인권센터로부터 고발을 받았는데 피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박현수 직무대리가 일선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얘기했는데요. 실제로는 사기 진작이 본인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호영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최소한, 제가 지난번에도 경찰청 안에 내란 가담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내란 가담자들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얘기했고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을 서울청장으로 앉혀 놓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당시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이미 승진이 다 됐어요.

그리고 PPT 좀 넘겨 봐 주세요.

승진 소요기간 앞에서 여러 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더 드릴 게 없고요.

넘겨 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박현수 서울청장직무대행은 예전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했고 남제현 경찰국장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했고요. 조정래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을 했고 전에 101경비단 부단장을 했습니다. 박종섭 지금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국무조정실에 파견 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승진 인사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인사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수사 의뢰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수본이 수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확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 줄 알고 인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아무리 직무대행이기는 하지만 경찰청장직무대행으로서 10만 이상의 경찰관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분들의 직급은 치안감 승진이라 정부 인사입니다.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박정현 위원 정부 인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추천을 했으니까 인사가 됐고 박현수 경찰청장직무대리는 단수예요. 혼자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인사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장관직무대행과 협의를 하는 입장이고 그 협의 내용이 위에서 정부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다시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 여쭙니다.

총장님, 지난 21대 총선 이후에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선거무효소송이 2년 3개월 만에 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21대 총선 이후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은 120여 건인데요. 단 1건 외에는 나머지 모두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법정 선고 기간인 180일을 넘긴 120여 건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선고를 촉구한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때 총장님은 안 계셨지만 선관위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부 종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총장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발언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선관위가 선거무효소송 판결 지연에 침묵하는 사이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장님,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연수구 송도2동 제6투표소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총 투표수 1974표 중 약 15%에 달하는 294표가 무더기로 무효 처리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재검표 과정 중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춧잎 투표지,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형상기억 종이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일장기 투표지는 1000매 이상 나왔는데요. 이런 사실 알고 계신지,

또 선관위원장을 여러 차례 역임한 총장님 경험으로 볼 때 이것들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현재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서 전부 쟁점으로 다뤄졌던 사안이고요. 문제는……

○조은희 위원 아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정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대법원에서……

○조은희 위원 대법원 얘기가 아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조은희 위원 대법원 뒤에 숨지 마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가짜 투표지냐 정상적인 투표지냐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대법원에서 이 투표지가 전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다시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그 현재도 봤습니다. 총장님께서 대법원 판결 뒤에 숨으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여쭙게요. 연수구 송도2동 제6투표소에 있었던 투표사무원, 참관인들의 인적 정보 협조를 통해 교차검증 절차에 협조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협조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을 뒤에 나오는 질문에서 제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나 하면……

○조은희 위원 그러면 말을 바꾸신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선관위도 헌법기관이지만 대법원도 헌법기관인데 이게 최종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총장님은 늘 대법원 뒤에 숨으시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재심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조은희 위원 제가 계속 질문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서 말을 바꾸시는 겁니다.

PPT 또 보시겠습니다.

그 탄핵심판에서 2023년 선관위의 보안점검 결과 유령 투표가 가능했다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핵심은 중앙선관위의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아서 해커가 마음먹으면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총장님 취임 이후에 국정원 보안점검을 받기 전까지는 해커가 선관위 망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럴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총장님, 지금 현재에서는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한 선관위의 불신이 계엄의 원인이다, 아니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

어 침해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엄청난 사회적 대가와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총장님, 우리 사회에서 선관위 부실 선거관리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 하나는 음모다, 하나는 부정선거 있다, 이런 문제만큼 소모적이고 국력을 낭비하는 이슈나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그런 점에서 부실 선거관리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저는 정파나 이념에 따른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수준의 위기라고 봅니다.

총장님은 2023년 7월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 되셨는데요.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던 보안점검 수검을 승낙 하셨습니다. 그 결과 25점 수준이던 보안평가 점수가 55.5, 71.5 이렇게 평가 점수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애써 주셨지만 그리고 저는 노고를 평가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PPT 좀 보시지요.

지난 1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1%나 나오기도 했는데요. 총장님이 취임하신 후에는 많이 노력을 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고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이러니 이 과정에 선관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선거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관한 자료, 정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부분 소유해 가지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서 선관위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값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반성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의 전제조건이 과거에 얽매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 결괏값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국정원의 도움을 받거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치를 개선했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인사 비리에 관련한 부분을 대대적인 내부적인 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했다고 국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과거의 비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그와 같이 잘못된 선관위였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제 바뀐 상황에서도 과연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과거의 잘못에만 그대로 매몰돼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신다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박현수 직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시는데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이번 계엄이……

○양부남 위원 나를 보고 답변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잘못된 조치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이번 행위가 비상계엄 이퀄 내란죄는 아니라는 것은 비상계엄 이퀄 내란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행위는 비상계엄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군병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국회를 봉쇄하고 서울시에 소요를 일으키고 이래서 우리는 내란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양부남 위원 나를 보고 답변하시라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비상계엄은 인정하고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지만 내란죄는 적절치 않다는 답변이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적절치 않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지금 내란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본인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조지호, 임정주, 영등포시장, 이상민,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했습니까? 통화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수사가 개시된 이후 말씀입니까?

○양부남 위원 예.

있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양부남 위원 나 보고 답변하세요.

○이만희 위원 마이크 때문에 그래요.

○양부남 위원 고개 들어도 소리 다 들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만희 위원 제 혼자 얘기입니다. 질의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기억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내란죄 수사된 이후에 박현수 직대는 통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조금 전에 이만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된다 했지요? 그리 답변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위원님, 통화 내역을……

○양부남 위원 통화기록을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건 제가……

○양부남 위원 사생활 보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소상히 통화기록을 제출했는데요. 오히려 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다 제출을 했고 아울러서 포렌식까지도 지금 현재 임의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통화기록을 제출하는 게 오히려 본인이 국회까지 와서 여러 번 질문을 받고 내란죄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통화기록을 제출하는 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위원님,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경찰국장의 임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와 자치경찰에 대해서 장관에게 조언한다고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찰국장의 임무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그리 이야기했지요. ‘치안과 경력 운영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치안과 경력 운영에 대해서 전화를 한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치안과 경력 운영에 대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요. 기본적인 어떤 계엄의 상황, 예를 들면 임정주 국장한테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제가 ‘이 계엄이 발생할 경우 도대체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수준의 전화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기본적인 경찰 상황을……

○양부남 위원 아니, 본인이 인사와 자치경찰 업무인데 왜 전화를 해, 관련 없는 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었고……

○양부남 위원 전대미문이 아니라 본인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왜 이 전화를 했어요,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굳이 법적인 걸 따지자면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 이런 계엄과 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치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담당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양부남 위원 장관 지시받아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장관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본인은 늘 답변하는 게 내가 전화한 사실이 있다, 그렇지만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고 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 상황 파악, 답변을 잘하신 것 같아. 무슨 상황, 그런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전반적인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부남 위원 그 상황이 아니라 경찰이 국회를 잘 봉쇄하고 있는가, 지금 150명 찾아가 못 찾아가 그런 상황을 관리한 거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위원님,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받아서 그것을 장관이나 윤석열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PPT 한번 띄워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PPT 보면 그날 저녁에 수없이 전화를 합니다.

다음 PPT 봅시다.

그런데 전화하는 게 말이야 그 전화 시간이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상황마다 전화를 해요. 본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처음 두 번 전화한 시간은…… 이진우, 김봉식에게 경찰, 군 출동한다 이야기해서 김봉식이가 경찰 배치하고 조지호한테 상황 보고 끝나자마자 조지호가 박현수 국장한테 통화합니다. 그런데 박현수 국장은 계엄 일어났다고 해서 알려 주기 위해서 전화했다? 경찰청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아닙니다. 왜……

○양부남 위원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했어. 내 말 들어 보세요.

경찰청장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계엄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알려 준다고 전화한다? 그것 국민을 기망한 겁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야, 지금.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부남 위원 설명은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답변 할 것 같으니까. 똑같은 답변이 아니면 답변하시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전화와 함께 행안부 상황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양부남 위원 행안부 무슨 상황?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제가 행안부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출근을 해서 알아봐야겠다고 하고서 바로 출근했던 것입니다.

○양부남 위원 행안부 무슨 상황을 알아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조지호 청장이……

○양부남 위원 조지호가 행안부 상황을 알아서 뭐 하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조지호 청장의 그 당시 물음이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것 말이 됩니까? 조지호가 행안부 상황을 알아서 뭐 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저에게……

○양부남 위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전화할 때는 전화한 시간이 조지호가 국회의원 출입을 할까 못 할까 우왕좌왕할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본인이 임정주한테 전화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한 것이지. 그 전화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 박안수한테 전화하고 박안수가 조지호한테 전화해서 국회를 봉쇄합니다. 봉쇄가 시작된 시간에 두 번째 전화할 때 임정주한테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나? 본인이 다 중간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양부남 위원 그다음, 세 번째 또 전화할 때는요 한창 국회 보좌관, 국회 직원들하고 계엄군이 육박전 할 때 전화를 해요, 강상문한테. 상황을 체크한 겁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 주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호영 차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계엄 이퀄은 내란이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계엄과 내란은 구성요건은 다르지만 내란 혐의나 불법 계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계엄은 내란이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 계엄, 무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정부의 기능을 이렇게, 국회의 기능을 봉쇄하고 방해했다 이런 것은 계엄령에도 헌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는 불법 계엄입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웃거나 아직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가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내란수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내란죄가 검찰로부터 적용돼서 기소되고 지금 재판에 회부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뜬소문이 아니라고요. 삼류 잡지에 보도된 그런 지라시 뉴스가 아니라고요. 국가의 수사기관에 의해서 정확히 확인되고 지금 인정된 바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세세한 부분들이 가려지겠지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요, 이상민……

이 자리에 지금 수사국장 나와 계신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위원장 신정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피의자로서……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그 부분은 국수본의 전담 특별수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수사국장은 국수본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국수본 소속인데 특별수사팀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지금 박현수 서울청장직무대리에 관해서 수사가 끝났습니까? 수사가 종료됐습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확인할 수 없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위원장 신정훈** 당연히 확인할 수 없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박현수 경찰국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니, 서울청장직무대행 나와 보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박현수 직무대리는요 본인이 이 내란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역할을 않은 것처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번 내란 사태에서 가장 바빠 움직인 사람이 박현수 국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내란에 가담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경찰행정을 보좌했어요. 상황 관리를 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기 업무는 아닌데 치안사무를 총괄하는 처지에서 장관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화를 했다? 각기 전화한 그 상황과 대상이요 지금 범상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하고 첫 통화를 하고 임정주 경비국장에게 두 번 하고 영등포서장한테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조지호, 그다음에 이상민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렇게까지 이 알리바이가 적적적적 맞는 전화 기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에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끝나지 않았어요. 본인에 대한 혐의가 클리

어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을 했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와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

○**소방청장 허석곤** 예, 소방청장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오늘 집무실 압수수색됐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민 장관 자택과 집무실 압수수색, 오늘 오전에 했어요. 어떤 혐의입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상민 장관이 저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5개 신문사 단전·단수를 위해서 경찰이 투입될 것이다,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하면 조치해 줘라. 몇 시에? 11시 인근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소방청장은 차장에게 이야기했고 지시했고 차장은 11시 40분에 서울소방청 소방본부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소방청장은 확인 전화까지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찰이 투입될 것이며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하라고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 언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소방청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했던 것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기하고 직접 관할되고 있는 경찰청 누구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겠습니까? 지금 안 밝혀져 있어요. 이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선상에 당시 경찰국장 그리고 관련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사도 안 끝났는데 왜 이런 인사를 하나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한 인사였다고요? 이호영 차장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쨌든 서울청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였고요. 소규모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소규모 인사가 필요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정말 이호영 차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만큼은 피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자기 나름대로 거듭나려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는요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국민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굳이 장관직무대행께도 묻지 않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이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적절치 못한 인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세요. 자기 아무 상관없다고 했던, TV 보고 알았다던 김봉식 청장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TV 보고 알았다던 조지호 청장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TV 보고 알았다고요?

들어가요.

저는 이 경찰 인사를 단지 어떤 특혜 인사냐 아니냐의 문제로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쪽에 위원님들이 따지는 내용이, 어떤 분도 그렇게 해서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엄 사태를 통해서 빚어진 내란, 내란에 대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의 정말 자세와 사후 조치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이것은 원상복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로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이호영 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정춘생 위원 본 위원의 오전 질의에서 박현수 단수 추천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소규모 인사이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 단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행안부와 논의해서 판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없다는 인식 아직도 변함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물론 복수로 하면 좋겠지만 그 상황이, 단수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그 불가피한 상황은 상황인 거고 그 인사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답변 아직도 유효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쨌든 단수로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정춘생 위원 아까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셨듯이 내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질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란에 종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의 인사도 저는 내란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그리고 내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의 문제의식과 비슷하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많이 의견들을 표출했더라고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오해를 살 만한 승진 인사’, ‘발표된 네 분이 전부 용산 쪽에 관련된 사람들’, ‘복수 추천을 하는 것이 통상 관례’, ‘단수 추천해야 될 사유가 될 만한지 사실 좀 의문’,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는 의미’, ‘절차를 사실상 무용지물화시킨 것’…… 이게 댓글이 아닙니다. 회의록입니다. 이게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 사항 명심해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대행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명백한 내란 선전·선동 아닙니까? 그냥 둘 겁니까,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시위하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수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십시오, 정말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여러 참고인이나 연관성, 서부지법 폭동 관련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뿐이 아니고요 전광훈 씨는 야외 집회에서 돈을 걷습니다. 그것을 현금이라고 합니다. 현금은 예배할 때 걷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내란 선전·선동하는 집회가 예배입니까? 예배로 보이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도 기부금품법 위반 문제하고 현금 문제하고…… 현금 형태로 외형적으로 보여서 저희들도 지금 아직 단서가 없는 상태고요. 고발 등 이런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고민하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다 밝혀집니다.

전광훈 씨는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가 한 주에 10억씩 쓴다. 10억씩 모든 행사에 하는 비용, 광화문에 있는 모든 단체들을 지원한다’ 이 말들을 스스로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이게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는지 불법 모금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보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촛불행동 아시지요, 시민단체 촛불행동?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촛불행동에 대해서는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계좌와 개인정보를 다 압수수색했고요. 작년 11월에는 사무실까지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전광훈에 대해서는 이런 것 못 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부분도 국수본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건데요. 전에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전광훈,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아마 기소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번에 제대로 수사해서 불법 모금한 돈으로 저렇게 내란 선전·선동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전광훈 지지 세력들이 또 5·18, 광주 금남로 가셔도

집회를 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세이브코리아랑, 예.

○정춘생 위원 극우 선동 세력들이 왔습니다.

이 행사에서……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대로 진행하시지요. 그대로 말씀하시고요.

○정춘생 위원 전한길 씨는……

○위원장 신정훈 1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셨으니깐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적용할게요.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윤석열의 계엄령이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억울하게 간혀 있다.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수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수사…… 이게 명백한 내란 선동이에요, 내란 동조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내란……

○정춘생 위원 홀로코스트 현장 가서 나치는 정당하다고 외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사……

○정춘생 위원 5·18 유족 앞에서 전두환을 복권시켜야 된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내란죄나 이런 것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라든가 참고인들, 증거…… 여러 가지 수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국수본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어떻습니까? 총장님, 선거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의 일정 부분이 오류가 있어도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거관리……

○이만희 위원 아니면 이게 선거관리라는 것은 오차범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정확하게 투표수와 득표수 같은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당연히 후자가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최선을 다해서……

○이만희 위원 이게 무슨 당락에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께서도 부정선거에는 동의하지 못하시는 입장이고 선거관리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계속 논의되는 주제가 고쳤다고 하는, 과거의 잘못된 사례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만희 위원 그런데요,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많이 고쳤는데……

○이만희 위원 무려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주권자들의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 선거에 대한 불신의 누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선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관위를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근간,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아니, 나는 이렇게 선거 부실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몰라주셔서 가지고 좀 원망스럽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아까 들렸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논의의 주제가 너무 현행도 과거와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는……

○이만희 위원 투표지를 형상 복원 용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그거는 형상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투표지 분류기를……

○이만희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뾰뚱한 투표지에 대해서, 새 것 같은 투표지에 대해서 이것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때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이만희 위원 아, 이것 형상 복원 무슨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게 그게……

○이만희 위원 그리고 220여 군데, 한 300군데—300군데도 아니지요—250 몇 군데에 투표가 이루어지고 총선을 하는데 그중에 126곳에서 21대 때 선거무효소송이나 선거에 대한 부정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만큼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론이 많이 팽배해 있었고……

○이만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개표까지 가서 들여다 본 곳은 8곳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그냥

기각하고 덮어 버리고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도 무려 2년 6개월이 지나서 그렇게 됐어요. 원래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180일 내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총장님, 지금 이제 부임하신 지도 얼마 됐지요? 23년 7월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1년 한 7개월 쯤 됐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제 선거관리도 몇 번 하셨고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보셔서,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사전선거에 관련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럼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총장님,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당일 날 투표한 사람의 숫자 또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숫자 대조할 수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뭐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대조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다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본투표 가지고 어떻게 대조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본투표는 어떻게 대조합니까? 뭐가 일치가 돼야 똑같다고 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각 본투표마다, 투표구마다 선거인명부가 따로 작성됩니다.

○이만희 위원 선거인명부에 도장 찍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투표용지의 삼각지 그리고 그 투표함에 들어간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삼각지하고 투표용 명부에 찍은 것하고 안에 들은 용지하고 같은가를 봐야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사전투표는 뭐 가지고 합니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만희 위원 아니,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관내 사전투표만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선거에서……

○이만희 위원 무슨 데이터베이스요? 아니, 실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통합선거인명부를……

○이만희 위원 물리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고요. 본투표는 삼각지하고 투표

수하고 명부에 찍힌 것하고 같이 대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사전투표는 뭘 가지고 대조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통합선거인명부의 서버의 정보를 가지고 대조하면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만희 위원 저도 잘 압니다. 개선된 점 말씀하실 때, 제가 행안위 간사 하면서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그때만 하더라도 그랬지요. 우리가 사전투표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그러면……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예.

○이만희 위원 그게 점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는 본인의 인쇄된 실물 증거도 본투표 끝나면 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인명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선거인명부에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삼각지도 없어요, 이거는. 투표지하고 뭘 가지고 대조합니까? 그냥 통합선거인명부하고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그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시정을 해서 이중투표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지 파일도 즉시 삭제하지 않고 1개월 내로……

○이만희 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주장해서 한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보장하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6개월 동안 보관하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6개월이 아니라 1개월만 보장합니다. 그 취지는……

○이만희 위원 30일 동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증거……

○이만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을 점검할 때는 그건 다 없겠네요, 대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선거소청이나……

○이만희 위원 이걸 여전히 개선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1개월. 그 기간 내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희 위원 그러면 소송만 제기하면 나중에 가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하면 무슨 자료 가지고 합니까, 다 없애 버리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리고 그 검토는 사전투표가 마쳐지면 본투표를 위해서 각 투표소마다 선거인명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소위 오프라인 쪽으로. 그런데 전자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시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각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언제 어디 투표소에서 투표했다는 사실 여부가 다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이만희 위원 총장님.

○위원장 신정훈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만희 위원 저도 총장님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투표자 수가……

○이만희 위원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총장님,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총장님 계속 이런 말씀 하고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 났으니까 아무 문제없다, 계속 그러시고. 오늘은 과거에 얽매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일을 왜 질문하느냐는 듯이 자꾸 말씀하세요.

P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6대인가요, 2000년 경기도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보이시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 지방선거에서 동일 득표가 나와서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이나 있었어요. 1표 차이로 운명이 갈린,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17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그냥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여러 번 말씀하셨어요—아무 문제없다. 대법원은요 그때 연수구의 재검표가 무효표가 294표 무효표 처리돼도 당락의 결정이 없다는 거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선거사무가, 물론 부정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누가 물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거 부실, 선거관리를 잘못해서 부실한 게 이만큼 나서 부실인데 그걸 자꾸 부정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데 여러 번 ‘대법원 판결 났는데 왜 자꾸 건의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요.

심지어 저는 정말 명망 있는 법대의 학장님으로부터도 ‘이 의원, 잘 체크해 봐라.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소리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 47%가 부정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큰 틀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분들은 그래도 정확하게 판단하겠지 했는데…… 총장님 현재 다녀 오시고 난 뒤에는 정말 우리 사회 지도층마저도 잘 살펴보라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장님께서 한 표를 안일하게 생각하신 답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갈등비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10년 동안 거의 1년에 약

300조 가까운 갈등비용이 집행되는데 지난 17년 박근혜 탄핵 시에는 1740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해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부실 이 문제가 더 부각이 돼서 상상을 초월할 우리 사회갈등비용이 나타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선관위가 부정이 아니라, 저도 이 한마디 하고 나면 이제 얼마나 많은 지탄의 문자를 받습니까라는 부정이 아니라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인력의 문제입니다.

인력이 보면 우리 선관위 직원이 298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달희 위원 그런데 선거 투표일 날은 1만 4259곳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21대에 왜 이렇게 21대 부정 얘기가 많이 나오고 부실 투표용지가 그렇게 쏟아지느냐고 보니까, 저희 방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번 보시면 비공무원 비율에서 공정·중립 인사가 45.2%가 21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 아르바이트를 써서 당일 날 교육 없이 그냥 투입해서 이런 결과가 났고 그걸 조금 보완해서 22대는 37% 정도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도 교육을 합니다.

○이달희 위원 교육을 했는데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공직자들이 고생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무원 업무 능력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교육이 잘 됐으면 투표용지가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왔겠습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이달희 위원 방금 한 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그러면, 보완하자고 지금 제안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버입니다.

지금 서버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제안합니다.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 민간인까지 합쳐서 이참에 저는 깨끗하다는 걸 한번 점검해서 국민들께서 선관위를 믿을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여야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이해식입니다.

이호영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이해식 위원 지금 탄핵 선고일에 대한 대처를 계획하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동대하고 장비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2017년 탄핵 선고할 때 3월 10일이었는데 그때 불법 폭력 사태를 막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해식 위원 경찰도 많이 다쳤고, 경찰도 53명이 부상을 했고 그리고 민간인도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최근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물론 그런 폭동이 일어나리라고 도저히 예상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조금 안일한 대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SNS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는 폭동을 선동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당의 정치인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고, 아까 정춘생 위원님 동영상에서도 보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히 대비를 세우는 측면에서 어떤 작전 같은 게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경비 대책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날 선고 당일에는 가용 경찰력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갑호나 을호비상을 통해서……

○이해식 위원 경찰력도 경찰력인데 예를 들면 아까도 나왔던 서울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라든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전한길 씨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내란 선동 혐의를 쭉 받아 왔던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이런 인적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식 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지금 박현수 직무대리가 결국 서울경찰청장으로 과연 이런 집회를 효과적으로 철저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본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가, 선고 당일 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기동 대행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이해식 위원 작년 9월 13일 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특조위가 만들어졌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만들어졌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공무원이 27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6명밖에 없어요. 행안부도 지금 다 파견을 하고 있지 않고 여기 경찰청, 소방청 다 파견 공무원을 하나도 보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조사 활동

을 합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특별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도 지금 17개 항목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 역시 6건 정도밖에는 받지를 못했어요. 거의 특조위 활동의 방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가지고 아마 지금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그 이유 그리고 언제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적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고기동 차관계, 사북사건이라고 아시지요? 80년도에 사북 탄광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2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진화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구제하고 명예회복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권고할 때는 재심 등의 화해 조치를 해야 하고 기념사업 등을 권고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8년 권고가 있었던 이래 지금까지 0%입니다. 이행계획을 행안부에서 세우게 돼 있고 특히 국방부 등에도 이 조치계획을 제출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도 왜 그런지 원인 파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오전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이호영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정동만 위원 지금 국회가 공직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통신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고위공직자도 헌법에 의해 사생활, 통신비밀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란 동조 분위기 속에 공직자들 울며 겨자 먹기식 통신자료 제출해 왔습니다. 만약 범죄 혐의가 있어 통신기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받아 적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사적으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만 위원 이때다 싶어서 모든 이들 죄인 만드는 무차별적 통화내역 요구는 자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만 위원 소방청장님,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지난 현안질의 시에 ‘12월 3일 밤 이상민 장관의 단수·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하셨는데 맞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제가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청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건 소란스러운 곳에 있는 장관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협조를 주문했다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방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하셨으므로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하셨다라고는 저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소방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직접 단수·단전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정동만 위원 없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 사안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도 단수·단전 지시 매우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장도 ‘당시 통화에서 단수·단전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고 발언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명확하게 지시했었다라고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정동만 위원 청장님, 지금 야당은 명확하게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소방청의 단전·단수 지시는 없었고 단지 급박한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의 발언을 마치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일방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청장님, 지난달 15일 대구 저수지에서 중학생 사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동만 위원 없다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중학교……

○정동만 위원 저수지 빙판 위에서 11명이 놀던 중에 5명이 물에 빠졌고 그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정동만 위원 아주 중요한데……

또 지난달 24일 대구 팔거천 빙판에서 초등학생 4명이 물에 빠져서 그중 1명이 사망한 사고도 모릅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동만 위원 같은 수난 사망사고가 불과 9일 만에 계속 발생했거든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 사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장님, 작년 겨울 수난사고 때문에 사망한 인원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만 위원 46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겨울낚시 등의 겨울철 수난사고 평균 한 1440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평균 한 5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겨울철 수난사고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단기간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되지 않을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과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겨울철 수난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각 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협력해서 사고 예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청장 허석곤 예, 꼭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께서 야당 의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경찰청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 관련한 내용은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김용현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의 경찰 조서에, 경찰이 조사한 내용의 진술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장께서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하고 경찰에 불려 가서 하는 이야기하고 다르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래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은 몇 날 며칠을 지금 이렇게 입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박현수 청장대리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박현수 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서 본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의 소회 같은 것을 짧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서울청장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나머지 수사도 하셔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 집회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후속 인사도 하셔야 되는데 국민들 앞에서 정치적인 일체의 고려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제 내란 진압하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보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보입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촛불행동하고 전광훈 목사가 정확하게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탄핵을 해야 된다, 한쪽은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최하는 대표적인 양대 세력입니다. 그런데 촛불행동에 대해서는 작년에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죄목은 기부금품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전광훈 목사 측은 훨씬 더 중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것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저항권을 선언해서 구치소에서 윤석열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자유마을이라는 극우 기독교 공동체 정치단체를 조직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면서까지 동원을 했다 하는 이런 우려, 그리고 소속 선교사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파괴 행동을 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수사국장님 나오셨어요, 김병찬 국장님?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이상식 위원 지금 촛불행동 후원자 도대체 몇 명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자료 요구를 해도 정확하게 안 주는데 도대체 몇 명 했습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인원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차례 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여기에 수사국장님 나오시면서 그 정도를 안 하신다……

지금 성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그런데 직장 이런 건 왜 묻습니까? 후원자하고 회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회원 6300명에 대해서 출금계좌 압수수색 신청도 했는데 너무 과도한 정보라는 요구로 법원에서 기각했다, 맞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제가 정확한 내용은 최근에 업데이트를 못 해 가지고요.

○이상식 위원 국장님, 내가 저번에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때 조지호 청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것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경찰 수사가 촛불행동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행위로 저 정도의 수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수사국장, 지금 이 답변을 다시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수사국장님이 파악하고 아니면 뒤에 있는 보조인력한테 물어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장소는 4개 장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장소 말고 사람, 인원이요, 후원자.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수사팀에다, 서울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청에다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바로 오늘…… 끝나기 전에 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지시해서

가지고 정확한 인원을……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다시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이상식 위원 더구나 촛불행동에 대한 저 수사는 2002년도에 누가 고발해 가지고 종로서에서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었는데 여당 의원 중의 한 분께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께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수사를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서울경찰청으로 승격해 가지고 재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거든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한 적 있습니까?

청장님 기억은 이것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제가 지금 부임한 지 일주일째 돼 가지고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상식 위원 누가 아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소환조사 일정이라도 지금 정해졌습니까? 뒤에 누가 아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광훈 목사는 2019년도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끌어내자’ 이 발언으로 크게 혼란이 있어 가지고, 폭력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경찰관들이 대거 부상하고 그래서 구속이 됐다가 결국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자입니다, 청장님.

촛불행동에 대한 수사를 정의하자면 저는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 여당 의원에 의한 하명 수사다, 그리고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과잉 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 엄정 수사해야 되겠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우려하시지 않도록 제가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압수수색도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소환 요구조차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번도 되지 않았다, 이것은 현저하게 형평성과 엄정성을 결여한 수사다.

청장께서 직접 본인 입으로 매사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청장님 수사를 지켜볼 겁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박현수 청장직무대행 앞으로 와 주세요.

본인에 대해서 정치경찰이다라는 이야기, 비난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당연

히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에 근무했다 이게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저는 그냥 제 직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조승환 위원 대통령실에 몇 번 근무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3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다음, 이정희 통합진보당 관련해 가지고서 리트윗을 했는데 이것은 작성한 것은 아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누군가 제삼자가 작성한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스마트기기를 지급받아 가지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오작동,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실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뉴미디어 담당관인가 가서 새로운 스마트기기를 받아서 새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예민한 것을 가지고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트위터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트위터 글들이 그 글들이었고 그중에서 제가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리트윗 연습을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버튼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리트윗을 연습해 본다는, 테스트를 해 본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승환 위원 수많은 트윗들이 되고 리트윗이 되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정부 기기를 가지고서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잘못됐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다음에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인이 경찰국장으로서 경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장관의 지시라든지 알아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비국장이라든지 영등포서장이라든지 조지호 청장이라든지 이렇게 통화한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저는 그 당시에 경찰국장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박현수 치안감에 대해서 개인을 보호하고자 이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체적인 정부 인사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반응을 하고 있다라

는 생각을 가집니다.

청장대행님, 지금 여러 분들이 치안정감 중에서 전보를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보를 검토는 했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저는 전보도 생각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보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소규모 인사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한 사람 움직이는 데 2명, 3명 같이 움직여야 되는……

○조승환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치안정감이 치안총감을 제외하고는 경찰의 최고 정점인데 여기를 승진을 시켜야 전보 인사를 통한, 승진을 시켜야 연쇄적인 승진 인사가 이루어져서 경정 이하뿐만 아니라 경무관·총경 인사에까지 영향을, 승진 연쇄효과를 줘서 우리 경찰관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도 검토를 하셨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상위직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는 했고요. 다만 그 협의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시스템, 즉 인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질책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정부 인사가 된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승진 기간의 문제라든지 정치경찰의 문제라든지 실제로는 다 아닌데,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정부 인사를 지적하는 부분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이광희 위원 서울경찰청은 청장과 3차장(치안감) 공안·수사·생안 이런 체제지요, 시스템이?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3차장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중에서 박현수 청장은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실 파견, 복귀를 해서 서울청장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어요.

아까 오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총경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자리는 총경 티오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무관으로 승진하면서도 다른 곳으로 보직 이동을 하지 않고 경무관으로 티오가 변경이 돼서 다시 그 자리에서 계속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국정상황실 말씀이신가요?

○이광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런 티오 케이스가 있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고서 초고속 승진해서 경찰청 정보국장을 거쳐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보직 변경됐어요.

또 서울청 공안차장으로 발령된 조정래 치안감, 윤 정부 집권 초기부터 101경비단 부단장 역임했었지요. 이분은 지난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를 빙자한 윤석열 생일 파티에 101경비단 29명 경찰을 파견해서 합창곡을 부르게 한 장본인 의혹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광희 위원** 언론에서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최근에 기사로 봤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런 것 해도 됩니까? 우리 경력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도 되는 거예요?

자, 서울청 생안차장으로 발령된 박종섭 치안감도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파견 후 복귀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승진 3인방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국민들은…… 서울청이 왜 이 3인방을? 윤석열 정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합창곡까지 부르게 했거나 특별하게 승진을 한 이런 사람들을 왜 여기다가 모아 뒀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모여 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이런 것 비슷한 것 생각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인사를 하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전체적으로 서울 수사 지휘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관련자들이 인사가 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여기다가 모아 뒀을까요, 대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기다가, 서울청에다가 모아 뒀을까요? 그것도 다 무리한 인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인사를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남제현 치안감의 경찰국장행도 좀 우려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 남제현 치안감의 경우는 행안부와 경찰의 사전 조율된 치안감 인사 부분 일부를 바꿔서 대통령이 경찰의 국기문란이라고 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의 당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 주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경찰청 남제현 당시 총경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마 기획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광희 위원 이분이 당시에 징계성 좌천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당시에 행안부 장관의 실수가 있었고 이후 보은 차원에서 승진하고 대통령실 파견으로 보상했다는 의혹을 갖는 분이네요. 그분이 왜 또 오셨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그 풍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 풍문이 되게 유명한 국기문란 사건인데 이걸 모르신다고요? 이런 분을 왜 여기다가…… 지금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이분들 다 수사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나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네요. 그리고 내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분들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행안부가 지금 경찰 장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계속?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경찰청과 행안부 경찰국에 모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게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주고 있는 사건이네요.

저는요 행안부와 경찰이 지금 경찰 인사로 이분들을 알박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요직 인사 잠시 미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안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뭐를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것 인사 안 하실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이미 인사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위원님 말씀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오랜만의 현안질의여서 이것저것 확인할 것들이 많은데요.

차장님, 경찰서 서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일이 없어도 원래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좀 일찍 나오는 게 맞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혜인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용혜인 위원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도 되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안 되겠지요.

○용혜인 위원 당연히 안 되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옹혜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봐 주시면, 지난해 7월에 예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대 젊은 청년 경찰이 직장 갑질과 과로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행님께 좀 전에 질문드렸던 서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이유도 없이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야 한다,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 이런 내용들은 상사가 고인에게 강요했던 내용들 중의 일부입니다.

이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2020년 고인이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할 당시의 상사였던 모 계장은 긴급한 현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무는 원래 일찍 나오는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아침 초과근무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술을 마셔야 한다고 집에 차를 놓고 오게 데려다 달라 이런 사적인 요구까지 했습니다.

경찰청이 갑질을 막겠다고 지난 2019년에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어요. 혹시 관련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얼핏 기억납니다.

○옹혜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개인적 용무 요구 그리고 인격 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 지시, 모임 참여 강요 등을 갑질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계장이 그런 일들을 골라서 고인에게 강요를 했어요. 이 일로 이 청년 경찰은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대행님, 이것 갑질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저 내용이 사실이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옹혜인 위원 사실인지 파악을 빠르게 해서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 이 청년 경찰이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건강이 좀 호전되기도 했지만 2024년 4월부터 사망 당시까지 근무했던 경비안보계에서 또 다른 상사에 의해서 인격 모욕적인 언행이랑 그리고 비인격적 대우 등의 갑질이 다시 시작되니까 우울증이 더 악화됐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남경찰청이 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서 직권경고라고 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만 취했어요. 유족들이 이 결과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본청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유족 재진정이 들어와서 조사 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옹혜인 위원 이렇게 자체적 감찰을 통해서 직권경고라는 낮은 수준의 조치만 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전 과정을 차장님께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고인이 직장 갑질뿐만 아니라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사망 전 일주일은 85시간, 그리고 4주간 평균은 61.2시간에 달합니다. 이것을 주 5일로 환산을 하면 사망 전 일주일은 하루 17시간을

근무한 거고요, 사망 전 4주간은 하루 평균 12.2시간을 근무한 셈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이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 건강하던 정신도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도 전국적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저렇게 많은 시간 근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가정이 양립하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렇게 원론적이고 전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도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장시간 노동이 자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일주일 근무를 35~44시간으로 봤을 때 그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살 사망 위험이 거의 4배까지 치솟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직장 갑질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교사라거나 아니면 기존 민원 업무에 새로운 상담센터 업무가 계속 추가되어서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공무원 등에 대해서 대법원이 모두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사망한 예산경찰서의 경찰관이 직장 갑질뿐만 아니라 극심한 과로에 처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예산경찰서의 청년 경찰의 죽음을……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옹혜인 위원 이 죽음을 순직 처리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대행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순직 처리 문제는 연금공단하고 협의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과로와 갑질이 그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순직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게 원인이라면 순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 사건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차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해당 사안을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경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경찰직협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한 달에 2명꼴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해요. 일선 경찰들이 더 이상 갑질과 과로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저도 국회에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달, 1월 달에 근무개선 TF팀을 출범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제도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좀 개선해 보려고 지금 현재 운영 팀을 짜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경찰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윤건영 위원** 차장님, 제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하의 단전·단수 관련 문제 제기를 상임위에서 했는데 언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그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단전·단수 문제가 언론에 불거진 건 봤습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1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도 20여 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초동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 이후에 한 달이나 지나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저는 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수본으로 하여금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얘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인사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평소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질의에서 그 부분을 질의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별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PPT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통계가 있지만 지역통계 하나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서 지역별 편중입니다. 영남 정권이라고 해도 이것 너무나 것 아닙니까? 50%가 넘어가는 치안감 인사를 하고 승진 인사 하는 게 차장님, 이게 정상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입직, 기능, 골고루 균형 인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 위원** 이게 균형이 있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영남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청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건 전임 청장이 충청 출신이어서 그나마 배려했던 거예요.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도를 다 합쳐도 영남보다 못합니다, 2023년 치안감 인사에서. 이런 인사를 해 온 게 윤석열 정부 경찰청 인사예요. 그 정점에 있는 게 최근에 한, 오전까지 차장님께서 ‘정상적인 인사야. 문제없는 인사야’라고 이야기하셨던 이번 인사가 정점이고요. 이런 불균형, 이건 너무 불균형……

저도 인사 해 봤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이 50%를 넘기다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입직이라든지 주특기 부분 따로 통계 제출 안 하겠습니까. 너무 잘 아실 거니까요, 차장님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번 인사 문제없어’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문제 다섯 가지만 제가 꼽아 봤습니다.

지방청장 경험 없으신 분이 서울청장이 된 사례가 아주 예외적입니다. 차장님, 맞지 않

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몇 건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몇 건이 아니지요. 최근 10년 내 1건밖에 없어요. 저도 인사했다니까요. 치안정감 티오 이외 승진한 사례 이것 정말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드물게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리고 치안정감 승진해 가지고 곧바로 서울청장 임명한 케이스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바로 서울청장으로 임명한 케이스가 있냐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전에……

○윤건영 위원 통계가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치안정감 7명 중에 서울청장이 넘버원인 자리잖아요.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역대급으로 초고속 승진시키고요. 추천부터 임명까지 5시간 걸리고요.

아까 절차 이야기하셨지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절차야 워낙 깔끔하게 정리하셨겠지요. 절차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정말 예외적이고 특별한 게 켜켜이 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반칙 아니냐, 예외적인 것 아니냐, 13만 경찰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라고 걱정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 정도도 동의 못 하시나요,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여기 나온 내용은 사실 그대로,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규모 인사고 책임자를 뽑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정부 인사에 대해서 장관직무대행과 협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건영 위원 정부 인사라는 걸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번역기를 돌려서 ‘용산 인사에 대해서 아무 말 못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최상목 대행이 이 인사 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차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못 한다는 사실 너무 잘 압니다.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경찰을 알아서 임명을 합니까.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사는 정부 인사예요. 그러면 정부가 염치가 있어야지요, 비상계엄하에서. 이런 난리를 쳤는데 염치없게 이런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무리를 해 가면서. 그런 걸 저희 민주당 위원과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지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차장님 탓이고 뒤에 앉아 계신 경찰 간부들 탓입니까. 차장님이나 차관님이나 용산하고 협의했다는 말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 인사인데.

차장님이 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무관, 총경 인사에서는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승진시키세요. 고생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컨대 서울청 경비계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전기 잡고 국회 봉쇄를 지시했던 사람이예요. 이 양반 지금 경정 16년이기 때문에 이번 대상일 겁니다. 승진시키면요 내란에 가담했던 의혹 있는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걸 걸러 낼 수 있는 건 차장님 능력이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장께서는 과거 선관위의 과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봐 달라는 취지로 하셨는데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요,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가 올해 업무보고입니다. 선관위 사무가 완벽하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총장님, 어떻게 이런 ‘완벽한’ 단어를 함부로 쓰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썼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지금 앞으로 보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잘하겠다, 제가 그것 믿겠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털고 가야 됩니다.

총장께서 탄핵심판 증언대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을 하고 싶어하는 여론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5% 했으니 95% 다 하고 싶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헌재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겠다’ 이렇게 사족을 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미래로 가려면 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돼 있는 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취지는 두 가지 기관만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선관위 자체가 할 수 있어요, 하겠다고.

지난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제가 검토한 부분은……

○**조은희 위원**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채용 비리 때 감사를 안 받으려고 얼마나 그러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노태약 선관위원장부터 전부 다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감사 못 해’, 그런데 채

용 비리 우수수수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안감사,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절대 못 해.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왜 헌법기관을 건드려’ 그랬는데 총장님 오셔서 보안감사 해 보니까 25점 나왔잖아요. 보안감사 하고 나서 50점에서 70점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 서버 보자는데 ‘우리가 법적 절차에 따라’…… 또 지금 숨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게 임의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은희 위원 제가 여쭙게요.

선거관리위원회, 독일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통계청의 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도 선거관리 공정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한 이유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채용 비리에다가 보안은 막 뚫리고 25점 받고, 지금은 국민의 절반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을 내세우고 법적 절차를 내세우는 게, 국민이 얼마나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데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얹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개헌을 해서 선관위를 헌법기관 아닌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총장님, 지금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선거 과정이 투명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거 사후검증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찬성합니다.

○조은희 위원 예.

그다음에 최근 탄핵심판에서……

1분만 더 주십시오.

3500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254개 시군구 선관위로 배송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행 사전투표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입법적인 부분이고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공연하게 사전투표의 투표값 자체가 진보와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 틀리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충의를 모으셔서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은희 위원 국회를 설득하십시오. 여당은 할 자세가 돼 있으니까 야당을 설득하십시오. 지난번에 야당의 어떤 의원이 총장님께 뭘 얘기를 하니까 법안까지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달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재밋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후 검증제도뿐만 아니라 사전 실 시간 참관제도를 통해서 검증하는 절차, 방법도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은희 위원 그런 것을 호소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본투표는 그렇게 검증하는데 그러면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랬더니 총장님 설명을 알아듣는 국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것부터 선관위가 나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불신이 해소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부분은 저희도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지만 선관위가 하는 여론조사의 값보다 국회도 입법조사처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민이 바라보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때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소중한 질의 시간을 제가 뺏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안드리다 보니까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지금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조은희 위원 부실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선거 관련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부실선거,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행안위와 또 국가기관에 의해서 여러 차례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거리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이런 음모론에 가까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관위 부정선거, 부실선거 관련 내용이 광장에서 확대·재생산되고 거의 선동·선전이 그야말로 사회 혼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상황, 미칠 영향,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우리 내에서 토론하고 또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사무총장께서 시간을 요청하셨으니까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선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 헌법이 그렇게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따라서 출범한 내용에 대해서 헌법기관화 돼 있기 때문이고요. 선거관리를 꼭 헌법기관만이 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헌법 개정을 토론하실 때 과연 우리나라 법제에 어떤 것이 맞는가를 검토하

셔서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1대 선거소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치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거소송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21대 선거소송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내용, 즉 부정선거의 의혹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 취지에 제가 그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가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런 투표지 같은 것들도 전부 정상 투표지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 헌법기관의 책임자로서 나와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틀릴 수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자, 이 부분은 이미 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취지고요.

그다음에 계속 선거관리 과실과 인사 비리에 대해서는 수차례, 여러 차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과를 하고 저도 국회나 다른 곳에서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제가 총장으로 와서 한 부분은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잘못을 한 것으로 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으니 그러면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실까, 그 부분을 조목조목 놓고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국정원에서 그 부분을 의혹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니네들 서버가 해킹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응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 신정훈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말로 부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30점, 50점, 70점 해서 결국 22대 국선을 지금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지침도 일부 개정해서 선거관리 절차도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문제는 21대 국선에서의 잘못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과거의 문제고 앞으로의 선거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다가오는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를 저희들은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책임지고 그걸 치러야 되는데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이 부분이 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재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 관리지침 역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치렀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저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부정선거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 4월 2일 날 실시되는 그 선거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그런 취지가 우려돼서 위원님들께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의 그 부분을 하시고 과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만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은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말씀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렇게 들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 윤건영 간사께서 부정선거 관련한, 부실선거 제도 관련한 청문회를 우리 행안위에서 선거가 공정하다, 아니면 선거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청문회를 하자고 저한테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의논되셨던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논란을, 정말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서 이 부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1분만……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당이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비쳐져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은 좀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라는 망령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살아갈 나라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오늘 선동의 소재로 쓰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은희 간사님 제안 충실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선전·선동의 소재로 써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도 이것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거기의 선전·선동에 놀아난…… 같이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라는 그 망령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정선거 망령은 벗자, 충분히 동의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두 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걸 마무리하고 다음에 우리가 양당 간사들의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협의를 거쳐서 우리 행안위가 할 일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정치체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제도하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고 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말입니다, 정치적 상대, 경쟁 상대에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관, 우리 사회의 기본 룰, 시스템에 대해서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게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담당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선관위의 문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파괴하라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법원 폭동까지 이르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저는 선거 부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선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도 주의 깊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실에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해 봅시다. 그런데 진영 논리에 입각해 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기본 시스템, 심판관인 선관위, 심판관인 현재, 심판관인 법원까지 공격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말 배격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행안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양당 간사께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문회든 현장 검증이든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만 선동가들에게 놀아나는 국회가 될 순 없다, 이 이야기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 참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병도 위원** 지금 계속 의사진행발언하는…… 제 질의 시간입니다.

○**이만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아,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본인의 생각을 너무 우리 위원들한테, 특히나 우리 여당 위원들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부정선거·부실선거 관리 문제는……

○**위원장 신정훈** 이게 어떻게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는 겁니까?

○**이만희 위원** 더 들어 보십시오! 나도 그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그만 좀 하세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을 참기 어려웠지만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도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하는 위원들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위원장 신정훈** 지금 책임 있는 정당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광장에 있는 전광훈이나 유튜버나!

○**이만희 위원** 저도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받아 가지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인데 왜 그걸 본인이 못 참고 계십니까!

○**위원장 신정훈** 본인 의사를 이야기하세요, 본인 의사를! 본인 의사를 이야기하시라고!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만희 위원** 그것은 본인 생각이예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도 위원장님은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위원장님 얘기를 뭐

듣기 좋아서 들었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웬만해야지요, 웬만해야지요!

○**이만희 위원**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적어도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위원들께서도. 그런데 본인께서 광장의 얘기다, 아니면 본인의 얘기, 주장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정 발언하시고 싶으면 앞으로 질의 시간도 시간 넣어서 하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만희 위원님이 위원장 하세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이라고 똑같이……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 시켜 주세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시켜 주실 수 있으면 시켜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자기 시간 넣으셔서 가지고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하더라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심판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격론이 붙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이렇게 있으므로 또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해소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적절한 그런 어떤 노력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총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우려를, 오늘 나타난 이 현상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 거라는 우려를 전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문제가 거의 그냥 소수였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선관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국민들이, 다수 국민들은 선거제도를 신뢰하고 민주주의를 신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엄 이후에 대통령을 했던 분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서 선관위로 군인을 보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된 겁니다. 지금이요 향후 뭐 부정선거 있었네 없었네 이 논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득 안 됩니다. 이게 큰 답이 있어 가지고요 자기 것만 믿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오늘 더 걱정은 이게 확산이 계엄 이후에 여야 정치권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이거요 앞으로 지지자들, 이게 정치권으로 번지면요 이제 소수가 아니고 유튜브 차원을 넘어서 정당 폭이 확대된 겁니다. 서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게……

아, 이걸 정말 어떻게 향후 지혜롭게…… 이게 청문회 하면 해결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걱정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 생각처럼 국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자괴감이 들고 정말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만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도태우 변호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 변론에서 대통령을 변론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통령 변론인이라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주장을 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어요. 보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웃지만 이걸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게 대체 어디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화면에 나오는 언론사가 스카이데일리 단독보도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PPT 보시면. 이 해당 매체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웃어넘기는 이런 지라시 같은 신빙성 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탄핵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보면서 수준이 낮아도 저렇게 낮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매체는 아주 허위·조작·날조 그리고 부정선거가 현재진행형이라고 지금도 진행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차장님, 이거 지금 수사 의뢰돼 있거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수사 의뢰하시고.

지금 이런 논란 때문에 총장님, 우리 선관위 직원들도 사기가 굉장히 많이 저하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선관위가 마치 부정선거의 온상처럼 되고 국가가 이렇게 쭉 나뉘져 있고.

그런데 답답한 건 사실 부정선거 주장은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은 이 선거 행위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했다는 그 말이지요? 그것 아닙니까? 아무튼 결과가 부정이든 뭐 잘못돼서 민주당에 유리했다는데 대선에 진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참패했으니까 이쪽에서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논외로 하고요.

이거 선관위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장님? 우리 직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대체 고민의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서버나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 소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관위가 보여 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고. 심지어는 처음에 제가 총장으로 왔을 때는 21대 국선 투표지를 한번 총장이니까 다 알아서 좀 맞춰서 확인을 해 달라라는 요청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투표지는 기본적으로 관할 선거위원회가 선거가 종료가 되면 봉인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적법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 의결을 거쳐 봉인을 해제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봉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총장이 마치 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 내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으니까 서버를 내가 직접 재검표를 한번 해 보겠다, 이거는 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버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의혹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부분에서 분명히 현재 과정에서도 제발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발 좀 서버 검증 좀 해 주십시오. 법원 입장에서도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그 화면……

○위원장 신정훈 총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3년 이하인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 신정훈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총장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총장님, 다 확인해 보고 싶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성곤 위원 아까처럼 확인해 보고 싶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제 원래 속마음이 그래서 다……

○위성곤 위원 확인해 보고 싶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성곤 위원 광장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했더니 오늘 이제 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부실선거라는 이름으로 부정선거를 회의장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지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총장님 말씀처럼 전부 검토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발도 안 하면서 내용도 없으면서 부실선거다라는 이름으로 부정선거를 이 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 선거사무 종사원이 몇 명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 인원은 2900명인데요. 실제적으로 선거가 벌어지면 사전선거의 연 인원 동원 인원이 투개표 사무원 11만 그다음에…… 아, 그러니까 투표 사무원 11만, 본선거 때 한 14만 정도 그다음에 개표장에서 한 1만 7000, 한 2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참관인이라는 분들도 사전투표에 한 10만 그다음에 본투표 때 한 14만, 거기도 한 20여만 명이 지금 동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60만~70만 되는데 실제적으로 투개표 사무원, 소위 선거관리관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전부 하는 부분은 약

34만 명 아니, 30만 명……

○위성곤 위원 투개표에 참여하는 게 한 34만 명 정도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30만 명.

○위성곤 위원 절반 정도가 공무원이고 절반 정도는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원래 법상으로 공무원 즉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은행원, 공공기관 이렇게 쪽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까지 지금 포함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위성곤 위원 정당에서도 투개표에 전부 다 참여하잖아요, 투개표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거는 참관인이시지요.

○위성곤 위원 예, 참관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참관인 말고 투개표 사무원은……

○위성곤 위원 사무원과 참관인은 구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당 가입자는 투개표 사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실물을 두고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당에서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충분히 본인들이 선거사무원도 배정하고 투개표 참관을 볼 수 있게끔 하고, 다 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공당이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건 저는 국민의힘이 그것에 대한 판단이 너무 흐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픕니다.

박현수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12월 3일 조지호 총장으로부터 두 번의 전화를 받으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내용을 받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저보고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전화를 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전화했을 때는 행안부 상황이 어떠냐라는 두 번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뭐라고 답변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일단 막 TV를 집에서 보고 있으면서 계엄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행안부 상황을 빨리 출근해서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 말고 다른 얘기가 없었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위성곤 위원 아니, 15초 처음 통화했고 42초를 통화했는데 다른 얘기가 없을 수 있나요? 그 당시 조지호 청장은 내란 혐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제 기억에는 그 내용 외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왜 전화를 했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고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박현수 국장에게 경찰국장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었지 않겠어요?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쁠 때 계엄 선포가 이루어지자마자, 25분부터 30분까지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그 15초 동안에 그 바쁜 때 전화를 두 번이나 걸었다? 얼마나 긴박했으면 급박했으면. 제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경찰관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박현수 경찰국장이 임정주에게 23시 10분경과 23시 35분경에 통화를 했습니다. 왜 통화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출근하면서 계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 임정주 국장도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출근을 해서 제가 다시 또 통화를 합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임정주 국장과는 자주 통화를 하는 사이인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게 자주 통화……

○위성곤 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통화를 하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임정주 국장과는 친한 선후배 관계는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친한 선후배 관계고.

그런데 임 국장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23시 37분에 국회가 전체 봉쇄되게 됩니다. 알고 있지요?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에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냐하면 이 시기가 중간에 한 20분 정도 국회 봉쇄가 풀린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전화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국회사무처의 김민기 사무총장도 그즈음에 관련해서 경비단장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계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것뿐입니다.

○위성곤 위원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을 박현수 국장께서는 하고 계시고. 저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분명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 그래야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중지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찍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까지는 실질적 업무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 업무 중단까지는 서울청 상황상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수본에서 참고인 조사를 두 번씩이나 했다고 하니, 그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조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참고인 수준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아지는데, 정황상.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국수본에서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수본에서는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럴 리가 있겠느냐 설득하는 편이고 지난주에는 저한테 너무 그거를 강요하길래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STOP THE STEAL’입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헛웃음을 지으시지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기하면서 그냥 부조리한 것처럼 본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 볼게요.

민주당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역전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검증특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이런 데 고발하려고도 그랬고요. 그럴 때는 득달같이 나서면서 이런 경우에는 왜 나서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지적할 거지요.

그리고 그런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재판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들어 보셨지요? 그리고 축구나 요즘 프로 스포츠 야구·배구·농구·테니스, 감독이 요청하면요…… VAR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총장님? 들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다시 되감아서 이렇게 보여 주는 것 말씀……

○**배준영 위원**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 주는 게 말하자면 공정한 심판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풀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 주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여론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만 하면 하겠다, 법에 이런 것을 하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선제적으로 투개표 절차라든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든지, 국민들이 뭘 궁금하게 생각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배준영 위원 재판에서도 배심원 제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면 그것을 평결로 해 가지고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선관위 입장에서도 이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는 이리이러한 절차를 겪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지켜보면 크리스탈 클리어(crystal clear)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은 선관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제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정부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님이 일선에 계시는 선관위 사무직원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무총장님은 정무직이고 정부를 대표해서 선관위를 대표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서 가지고 국민들이 뭘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면 의혹을 해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필요하더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입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선관위에서도 제안을 하십시오.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잘 지켜보고 그 과정을 정말 오해 없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관위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뭘 보여 줘야 된다……

○배준영 위원 왜 그걸 못 알아들으십니까? 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얘기한 대로 서버……

○배준영 위원 아니,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증거는……

○배준영 위원 아니, 제 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끝까지 그걸 매치해 가지고 본인이 선관위에서 국민들을 위한 대안을 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게 답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인천이 마케 도시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인천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서 제 지역구로서 가슴 아픈데, 제가 검찰 백서를 봤어요. 여러 광역시랑 특별시 중에 제일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경찰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경찰의 임무는 안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

나라 안전하게 안심시켜 가지고 그것을 정부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서 안전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게 그게 경찰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라고 그랬어요.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정하게 하는데 뭘 문제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대안을 내놓는 그런 자세로 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제안을 제가 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21대 국선과 관련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소위 실물적인 내용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제 권한 밖이니까 다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안 보여 준 부분이 지금 사전투표제라는 이 성질 때문에, 전자정보로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국민들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이니깐 이것을 그러면 보여 줄까, 보여 달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는데, 그 보여 주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법적인 제한이 있으니깐 지금 현재나 아니면 대법원 소송에서 이것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제가 여러 번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소위 재판기관이 그 검증 절차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더 뭐를 하라 마라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서 저희 선관위 입장은 이러니까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그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제 말씀의 취지를 못 알아들으셨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질의할 게 많았는데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습니다.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다. 지구는 평평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검증돼 있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돼 있고,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딱 부정선거가 그렇다고 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임명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데 대통령의 임명권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헌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국회와

같이 유일하게 인사권이 위원회 고유적인 권한으로 남아 있는 기관입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님들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일부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그동안에 신뢰를 잃은 부분들이 있었지요,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인정합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나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할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짜 부정선거가 일어났었나라는 점인데, 국정원에서 조사 한 번 했었지요? 국정원 3차장이 얼마 전에 부정선거의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나요,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모경종 위원 국정원에서 확인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다만 본인이 점검한 부분 5%에 대해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게 사족을 달긴 했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95%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할 수도 있지만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이전에 그 5%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왜 부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다만 그 5% 부분은 문제가 있고, 사실은 선택권을 국정원이 전부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된 검토 대상이 서버에 있었고 그 5%라는 계산적 수치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PC 숫자까지 전부 합산한 비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절하게 서버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밝히지만요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저도 없었다고 믿고 살고……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부정선거 없다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절차는 저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막고 있다, 피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 47%가 있다고 생각하니깐 확인해야 되냐 이 논리는 조금은 저는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국민의 70% 가까운 사람이 김건희 특검법 하자고 합니다. 그것 왜 반대하십니까? 국민의 70% 가까운 사람이 명태균 특검법도 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반대 목소리 내십니까? 그런 것은 조금은 빈약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제현 경찰국장님 나오셨지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경찰국장입니다.

○모경종 위원 경찰국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지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본인의 어떤 점 때문에 승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저는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국장으로서 앞선 전임 경찰국장한테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특별히 인수인계 받은 건 없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본인이 경찰국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개별 법령에 부여된 장관의 권한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그게 인사와 자치경찰 관련된 내용이지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나 자치경찰위원회 재의 요구와 관련된 사안도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세간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다 듣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번 치안감 승진 세 분 된 것과 치안정감 승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이 지점에 대해서, 오늘 이 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되지 뜬구름 잡기 같은, 지구 평평설 같은 그런 부정선거 또는 부실선거로 포장한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석곤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청장입니다.

○모경종 위원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계엄 당일 날 전화를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11시 37분경에 전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때 회의하고 계셨나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소방청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당시 회의의 회의록 남아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상황판단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저희들이 거의 매일 사건·사고 일어날 때마다 하는 회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전 이상민 장관이, 전 행안부장관이 전화해서 단전·단수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요? 그렇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명확하게……

○모경종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대답만 하세요. 그렇지 않았지

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모경종 위원 그러나 경찰에서 연락이 갈 거니, 단전·단수 관련된 내용으로 연락이 갈 거라는 이야기는 했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단전·단수는 거기서 빼야 되고요.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소방에서 적절히 조치하라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면서 JTBC나 이런 언론사 이야기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JTBC나 언론사는, 그러니까 ‘경찰에서 요청 가면’ 그 앞에 다섯 곳을 언급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경종 위원 그 언급을 그러면 왜 한 겁니까, 단전·단수 이야기도 안 했다면? 그냥 JTBC, 여러 가지 5개 언론기관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이 이야기하면 협조하라 이 말입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장관님이 어떤 취지와 맥락으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모경종 위원 좋아요.

그러면 파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5개 언론사를 이야기한 것 맞나요?

○소방청장 허석곤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협력하라고 했던 것 맞나요?

○소방청장 허석곤 협조 요청인지 협력인지 모르지만 적의 조치하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입니다.

고기동 차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박정현 위원 춘천 민간 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알고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박정현 위원 알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입주 예정자들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디 저희를 도와주세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었던 1000여 명의 무고

한 시민들이 한순간에 집도 돈도 없이 빚만 1억 덩그러니 남게 생겼습니다. 제 몸 하나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필요했던 건데 과한 욕심이었나요? 이 사태의 주범들과 이를 관망하여 눈덩이처럼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는 그들의 죄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새마을금고가 있다는 건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에 행안부가 낸 자료입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감독 한층 더 강화하겠다’. 여기서 ‘한순간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 있게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건전성 관리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서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 말은 어디에 갔습니까? 어떻게 뭘로 관리 감독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일단 춘천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이 돼 있고요. 관련 기관들에서 지금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일단은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천시도 함께 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PPT에서 나온 것처럼 제재공시 내역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한 1.5배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현황도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거의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 현황도 2022년부터 점점 점점 늘고 있어요. 거의 배수 가까이로 지금 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혁신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새마을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 중앙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그냥 꺾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러니까 이 춘천 임대아파트 300억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전체적으로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관련해서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많이 입법을 도와주셔서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에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법이 강화됐는데 시행령으로 그것을 깎아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시행령 통치, 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 통치가 횡행하는데 지금 행안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닙니다. 시행령이라는 게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강화된 금고 감독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차관께서 되게 한가한 소리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역경제지원국이 관리하는 건가요,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쪽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경제지원국이 저한테 보낸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여기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개별 금고에 대한 징계 사례로 인하여 전체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바 해당 자료를 의정활동에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에 쓰지 이걸 어디다 씁니까? 의정활동 외의 활동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무례하게 자료를 내니까 이런 식으로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어쨌든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줄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 그냥 행안부에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만나서 토론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실과 좀 상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의정활동 외의 활동’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제가 인사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호영 차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서울청장후보자 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앞서 여러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박현수 서울청장직무대행 인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부적절하다는 여러 의견을 냈어요. 이게 한두 명이 낸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명이 냈습니다. 적절한 인사인가 또 오해를 살 수 있다, 단수 추천이 맞냐, 현장 경험이 없다 이런 의견들을 냈는데요. 그래서 급기야는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경찰청에 복수 추천을 해 달라, 단수 추천을 놓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후보자가 상급 부서에 주로 근무를 했고 민생치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시면……

○위원장대리 윤건영 1분 드린 거니까요 마무리를……

○박정현 위원 예.

민생치안 분야 근무 경험이 부족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경찰청에 회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받으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런……

○박정현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승진 인사 과정의 문제도 있고 업무 적합성 문제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추천하시면 되는 겁니까, 지금 경찰청 직무대행께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왔고요. 일부 의견이 저렇게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일부 의견이라는 게 결국은 핵심적인 지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봉식이 서울청장 하면서 내란 동조자로 내란 동조 행위를 한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래도 일단……

○박정현 위원 그래서 서울청장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옥중 인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3만 경찰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사기가 얼마나 꺾이겠어요. 공정한 인사를 해야지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고 그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인사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간부 중에 내란 가담자에 대한 내부 감찰과 조사 당장 착수해 주십시오. 착수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하여튼 이번 인사에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청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견이 없지 않습니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내부 감찰과 조사는 당장 착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조사는 지금 수사 결과, 수사 사항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양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좀처럼…… 내가 지금까지 봐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침착하게 차분차분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오늘 약간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죄송합니다.

○김종양 위원 지금 저도 부실선거·부정선거 의혹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선관위에서 그분들이 수궁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게, 진짜 부정선거나 부실선거가 있으면 그건 들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수궁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그런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선관위만 ‘말도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해가 돼’ 이런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니까 결국은 22대 국선 그대로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준비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할까 봐 이런 생각들이 제가 있어서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래서 제가 21대는 잘 모르겠는데 22대 국선도 나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만족 안 하신 분도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앞으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오늘 야당에서는 보니까 저희들 선거 부정·부실선거 이야기만 나오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현수 서울청장직무대리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사라고 저는 보는데 너무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안부 경찰국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12월 3일 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경찰국장 입장으로서 누구하고든지 통화를 해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찰청장 또 관련되는 그런 장하고 통화를 한 부분을 내란 동조, 내란 공모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수본에 두 번이나 가 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을 갖다가 앞으로 있을 각종 일과 관련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경찰국장 중에서, 지금까지 승진은 다 했잖아요. 이호영 직무대행도 거기에 계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자리가 워낙 중요한 일이고 또 힘든 자리니까 다

승진시켜 주는 게 관례이고 그리고 또 정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인사를 민주당과 정체성이 맞는 그런 사람을 승진시켜 가지고 내보내는 것은 또 적절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왈가왈부……

물론 그 사람이 임명돼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인사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부풀리기식으로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외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대전 초등학교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경찰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비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지요? 부처 간 대책회의를 개최했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대책이 아니라 수사본부 설치해서요 거기에……

○**김종양 위원** 수사본부 말고 그 이후에, 하늘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응 대책……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교육부하고 지금 여러 가지, SPO 운영이나 아니면 학교장 책임하에 전담요원 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 내용 중에……

1분만 더 주세요.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김종양 위원** 내용 중에 보니까 SPO, 학교전담경찰관들 한 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는 협의를 됐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한 학교에, 지금 SPO가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인력을 경찰관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러니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다만 학교 자체별, 교육부 자체적으로 자체 인력을 양성하든지 채용하든지 해서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협력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양 위원** 저도 그때 교육부에서 나온 대책을 보고 경찰청에 너무 큰 부담을 줄 수도 있겠구나, 순증이 되면 모르지만 한 학교에 1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했을 경우에, 배치한다 그러면 결국 다른 데서 빼내 가지고 그쪽을 갖다가 증원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증 없이 그렇게 대체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치안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 가지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박현수 직무대리님 나오세요.

휴대폰 몇 개 사용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개인폰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하나 사용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번에 비화폰 정부로부터, 경호처로부터 받아서 사용한 사실 없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비화폰 존재는 전혀 모릅니다.

○양부남 위원 비화폰 안 받았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양부남 위원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했지요, 경찰청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건 본인이 사용한 휴대폰을 의뢰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양부남 위원 본인이 사용한 휴대폰을 의뢰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하나 사용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양부남 위원 그 통화 내역 제출했다고 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포렌식에 다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통화 내역은 제출 안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통화 내역을 따로 제출한 건 아니고요. 포렌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운 건 없습니까, 통화 기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지운 것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좋아요.

오전에 했던 질의입니다. ‘계엄 해제 이후 조지호 청장, 임정주 국장 그다음에 강상문 서장, 이상민 행안부장관하고 통화했냐’ 질의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기억이 없는 겁니까, 통화를 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러니까 계엄 해제된 이후의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상민 장관님과는 장관님이 퇴임한 이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고요. 조지호 청장님과는 조지호 청장님께서 수사를 받으러 가기 하루 전까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수사 잘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임정주 국장과 강상문 서장과는 전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전화한 적 없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여기 와서 증언했던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도 처음에는 비슷한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있으면…… 그런 사실 다 드러났고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현재 기억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조사를 두 번 받았다는데 그 조사 어디 가서 받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특수본에 가서 받았습시다.

○양부남 위원 특수본에 가서 받았습니까, 특수본이 와서 조사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국수본에 가서 받았습시다.

○양부남 위원 직접 가서 받았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오전에 계속 ‘나는 상황을 체크했다’, ‘상황을 점검했다’ 했는데 그 상황,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뭘 했습니까? 상황을 알고 나서 뭘 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말씀드린 대로 경비국장과 두 번에 걸친 통화에서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본인도 출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출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통화에서는 너무 바빠 가지고서 통화할 수 없다고 해서 바로 10초 만에 끊었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가 없었고.

두 번째, 강상문 서장과의 통화에서는 ‘국회 주변의 현장 상황이 어떠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 정도 상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본인이 상황을 파악해서 그냥 그대로 있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그렇습니다. 특별한 조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윤석열 피고인한테 보고했던 것 아닌가요, 여러 정황을 보면 본인이 매신저 역할을 한 걸로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 되는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위원님,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좋아요. 들어가십시오.

이호영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양부남 위원 이번 인사를 단독으로 하셨다는데,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단독으로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행안부장관직무대행하고 협의해서……

○양부남 위원 물론 그렇지, 그런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협의해서……

○양부남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대통령실에서 차장님의 의지와 반하는 인사를 요구했을 때 거절할 용기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가정…… 그게 무슨 가정이야?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이것은 주관적인 질문이지요.

○양부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절할 용기가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용기를 물어보시는 것은, 당연히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양부남 위원 혼자 인사를,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대통령실에 반하는 인사를…… 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대통령실하고 직접 교감은……

○양부남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나면요, 잠깐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청 직대가 이런 인사를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행안부차관하고 둘이?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여하튼 저는 절차대로 행안부장관직무대행하고 협의를……

○양부남 위원 그래요. 계속 조자룡 현 칼 쓰듯이, 고장난 스테레오판 돌아가듯이 법과 원칙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이 판단하고 지금 청장직무대행님 가슴속에 울리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양심에 반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계속 단수 추천에 대해서 소규모 인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했는데 소규모 인사 때는 단수로 한다는 규정 없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치안정감이 김봉식 빼고 6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단수로 할 수가 있습니까, 6명이 있는데?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원래 치안정감……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치안정감 7명에서 김봉식이 12월 27일 날 해임이 됐습니다. 이것 결원 보충하려면 최소한 6개월, 급하면 3개월 지나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개월 11일 만에 승진 예정자라는 이름으로 꿈수를 냈어요.

또 하나는 경찰과 그 직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청장직무대리 제도는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청장직무대리는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생활안전차장 순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할 때 행안부차관한테 질의했더니 대리 규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정부의 대리 규정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한다’. 그래서 경찰관 직제에 관한 규정은, 그 대리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에요.

이것을 내가 경찰청에 다시 질의했더니 경찰청 훈령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훈령보다 상위 법령이 경찰관과 그 직제에 관한 규정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게 위원님, 직무대리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에 있는데요.

○양부남 위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거기에 보면 승진 내정자를 전보 대리로 할 수 있도록 규

정돼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승진 예정자를 떠나서 서울청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왜냐하면 동일한 직급에서 갈 때는……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서울청장직무대리 규정 자체가 없어요. 경찰청 직제에 관한 규정……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서울청장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적용되는 겁니다, 직무대리 규정은.

○양부남 위원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경찰관 직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행안부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계속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번 서울경찰청장 인사의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최종적으로 임명권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시고요.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최상목 권한대행이십니다.

○위원장 신정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러 자리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본인은 행안부장관, 그러니까 지금 차관을 지칭하면서 제청을 받아서 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 본인의 의사였다, 본인이 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보면 청장의 추천과 제청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탄핵된, 탄핵 과정에 있고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런데 그러면 두 분이 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 법률로 보면 두 분이 했어야 되는데 두 분이 지금 한 것 같지가 않아.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찰청 직무대행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기라든가 절차라든가 이것은 협의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인사를 적시해서 박현수 경찰국장을 승진시키기로, 그 구체적인 지칭을, 지명을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보고를 권한대행께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보고를 드렸다고요.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지금 박현수 국장을 승진시킨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니, 경찰청 직무대행하고 협의된 내용을 권한대행……

○위원장 신정훈 협의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찰국장으로 지명해서 되는 내용들을 이 두 분이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 인사안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차장,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국장을 승진 대상자로 지칭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협의된, 인사 협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말씀드릴 수 없다?

결국은 인사권이 없는 용산 대통령실 그런 관계자들에 의해서 지금 저질러진 거예요. 합법적이지가 않아요.

최소한 이 인사가 합법적이려면 최상목 직무대행께서 ‘제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최소한 행안부차관께서 ‘제가 인사를 다 검토했습니다’ 했어야 돼요. 지금 권한 없는 자가 추천해 가지고 제청하고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회의록 없는 거지요? 애매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두 달 이상 지났어요. 이미 시효가 지나 버렸어요, 작성될 시효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계엄 때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신정훈 예.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작성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현재 부존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애매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정관 있습니까, 이 자리?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말씀처럼 부존재합니다, 현재.

○위원장 신정훈 부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작성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속적으로 현재에서 윤석열이나 이상민은 ‘자료가 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금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본회의 때 말씀드렸드시피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는 받았습시다만 관련 내용을 정확히 저희가 확인하지를 못해서 작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규정과 법령에 따라서 작성할 수 없는 국무회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국무회의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중인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회의록은 없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작성 못 했습니다. 부존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3분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호영 대행님 그리고 고기동 대행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잘못된 인

사를 방어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범죄자를 상관으로 모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14만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박현수 대리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선 경찰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자존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12월 3일 내란 직전, 전날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문자 두 통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도 보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언론, 증인 신문, 헌법재판소 할 때……

○정춘생 위원 국정원장은 당일 날 대답을 안 하고 그다음 날에 답변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이상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정춘생 위원 민간인인 영부인이 왜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정춘생 위원 이날은 기억하시겠지만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야당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날입니다. 아시지요? 보도 보고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보도……

○정춘생 위원 그리고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은 그날 질의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인 것 같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보도 보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보도 봤습니다.

○정춘생 위원 김건희 씨는 그간 명태균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내란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민간인인 김건희에게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정춘생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씨는 이번 내란의 이유가거나 아니면 내란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전혀 조사도 받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수본 특수단에서 아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소환해서 조사하고 수사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국수본에 여기 행안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됐다고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국정원장과 직접 연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화폰을 왜 지급받아 누구와 연락했고 사용했는지 그리고 국정에 얼마나 깊고 넓게 개입해 왔는지, 내란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아마 수사를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김건희를 수사해야 내란이 종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이호영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이만희 위원 어쨌든 우리 14만 경찰 조직의 인사는 많은 직원들의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저기인데요. 차질 없이 나머지 인사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지금 본투표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 거기에 이용되는, 활용되는, 투표 행위에 이용되는 노트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본투표요?

○이만희 위원 본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요, 없습니다. 투표인명부 자체가 있으니까요.

○이만희 위원 없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본투표에서는 한 1만 2000군데 투표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노트북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1만 4700개 정도 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1만 4000군데……

한 3500군데 사전투표에 활용되는 노트북, 몇 개 정도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열을 깔아서 하니까 적은 데는 6개, 많은 데는 열몇 개까지 갑니다.

○이만희 위원 그것을 제가 알기로 거의 1만 3000대가량의 노트북을 활용을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상당히 많이……

○이만희 위원 그것을 다 민간에서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임차합니다.

○이만희 위원 여러 가지 부정 투표에 대한 반론으로서 제기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에 60만에 가까운 투표 종사자가 동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다

속이면서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하나의 중요한 논거로 들지 않을까, 선관위에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 그 관련되는 사항들 중에서 많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민간으로부터 매년 선거할 때마다 대여하는 1만 3000대가 넘는 노트북의 안정성, 거기에 아무런 무결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그런 온라인상으로 접근해서 투표소에 있는 여러 가지 중앙 서버가 어떤 오염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내는 것이 사전투표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고요.

오프라인 쪽에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관외 사전투표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더 검토해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 검토를 미리 해서 혹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이만희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요.

소방청장님, 오늘 제가 준비해 왔는데 못 했는데…… 해상 소방 화재와 관련된 소방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이만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구연한의 문제, 훈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잘 챙겨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총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받을 때 신형을 받습니다. 신형을 받고 선거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삭제하고 반납하는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사전투표를 할 수가 없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희 위원 어쨌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전투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하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여러 가지로……

○이만희 위원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계속 논의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고기동 직무대행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모경종 위원 지금 서울청장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찰청장도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장이요?

○모경종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공석입니다.

○모경종 위원 지금 행안부장관직무대행으로서 경찰청장 공석에 대해서 빨리 채워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분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어쨌든 서울경찰청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치안의 책임자가 채워져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장을 바로 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누구를 채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렸습시다만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직무대행께서 그 이야기를 안 나눴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직무대행과는 어쨌든 서울경찰청장을 바로 공식으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나눴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보고할 때는 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고……

○모경종 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주신 내용에 보면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지방재정 안정화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행안부가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2026년 7월, 지방선거가 펼쳐지면 새로 신설되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인천에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의 검단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입법해 가지고 통과해서 이 자치구가 설치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법률이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과 함께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를 했

는데 정말 몇 안 되는 여야가 함께 공동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내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자치분권법에 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치분권법은 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를 상정한 법률이어서……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신설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된 내용은 있지만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왜 갑자기 신중검토로 바뀐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다시 한번 잘해 주시고요. 행안부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치구입니다. 행안부가 같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오늘 어쨌든 인천시장이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잘 협의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행안부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민주당의 위원님들께서 선거 얘기를 하면 왜 너희는 음모론자들, 부정선거 음모론들, 광장의 얘기를 국회에 갖고 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식으로 오늘 매도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정말 선관위하고 2시간 이상 꼼꼼하게 짚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이 선거 부정이 없고 부실한 선거를 어떻게 보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얻은 결론은 국민들께서 이해 못 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전자 개표기. 전자 개표기 바깥에서 온라인하고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자동 분리기잖아요. 이런 이름을 전자 개표기 이렇게 해 놓고 국민들이 모른다고, 그 안에 개표장이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들이 쓴 용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리고 총장님께서 현재에 가셔서 22대의 선거 어떻게 됐나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의아해해요. 10여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0여 건은 제가 살펴보니 선거공보, 벽보나 이렇게 간단한 건데 총장님 오셔서 많이 노력해 갖고 보완이 된 건데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니까 아직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력의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인력 투표관리관, 사무관 현황에서 21대가 유독, 45% 가까이 공정·중립 인사, 일반 알바지요. 우리가 22대에 좀 줄어든 건 29%, 30% 안 되는 사람을 외부 알바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은평 의용소방대에서 여섯 분 추천받았는데 그중에 국적이 중국인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평소에는 한국인인 줄 알고 의용소방대에서도 추천하고 한국 이름이었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적이 중국이었어요. 이렇게 디테일한 것 하나하나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인원

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님, 선거사무 종사자가 한 14만 명 하루에 딱 필요한데요. 우리 공직자들 하루 다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이 선거 종사 업무에 가담할 수는 없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현재 지방공무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국가공무원도 좀 더 대상이……

○**이달희 위원** 안 되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입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라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동영상 하나 잠깐 틀어 보세요.

한번 보고 가지지요.

(영상자료 상영)

불륜 키워서 다시 좀 해 주세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인권위원회 사무실 14층에서 있었던 건데 대행님,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윤석열 방어진 보장 관련 안전을 심의하는 날이었는데 저렇게 자정단을 자처하면서, 사실 저런 사람들을 정치 깡패라고 불러요. 정치 깡패가 사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승을 부렸고 90년대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저렇게 나타났어요, 서부지법 폭동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정치 깡패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건 완전히 국헌문란, 똑같은 행위예요, 저게.

지금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당시 인권위 측으로부터 퇴거 요청 등은 없었던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이해식 위원** 인권위가 왜 퇴거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의문스러운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불법행위 확인되거나 고발 등이 있으면 절차대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119 신고가 12건이 들어왔는데 보면 ‘방패로 못 가게 했다’, ‘확성기를 들고 있었다’ 상호 폭행 관련 신고가 있었고 ‘어떤 남자한테 폭행을 당했다’, ‘남성에게 밀쳐졌다고 폭행으로 신고하고 싶다’ 똑같은…… 이렇게 6건 정도가 이런 신고 내용이에요. 폭력 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인권위 측에서는 마찰은 없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인권위가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도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우리가 언론을 보면 대충 짐작해요. 그렇지요? 짐작은 하는데 경찰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112 신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저런 정치 깡패 짓 못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부가 6월 첫째 주에 국민의힘 불법 대선캠프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참고인들을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고발이 3개월이 지나서 상당히 늦은 시점이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박현수 서울청장이 이 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 차원에서 수사 지휘하도록 국수본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청장도 국수본부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휘를 받습니다. 수사에 관련돼서 지휘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게 해서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제가 국수본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박현수 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얼마 안 되서 가지고 마약수사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 하고 계시지요, 영등포서 마약 수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정확히 뭐……

○이상식 위원 마약수사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용산의 외압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치로 실증할 수 있는 그것만 한번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알리미라는 것은 경찰의 지명통보 그리고 APIS는 지명수배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이게 APIS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작년 2월 20일 날 12명을 등재했는데요. 그런데 2월 22일, 24일, 두 번에 걸쳐서 무사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세관의 고위 간부는 저한테 직접 ‘이들 3명이 3등급이고 주범을 잡기 위해서 통과시켰다’. 세관에 이런 재량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마약을 소지했으면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지요? 윤석열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도 대국민 계몽용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봐줬거나 놓쳤거나’. 이게 APIS 등록된 사람들이 7월 5일 날 들어와요, 2명이. 그런데 신체 수색만 했어요. 그리고 무사 통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달 후에 9월 5일 날 정확하게 공항 외부에서 영등포 형사과에 의해서 검거가 됐거든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세관이나 검찰에서 이 사람들 감시하고 동선을 추적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니까 ‘열두 차례나 국경이 뚫렸다’, ‘국민 수백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무사 반입됐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시스템적으로도 감사원 감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제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한테 엄정 수사를 촉구했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청장님 한번 보시고, 면밀히 보시고 지금은 잘 모르신다 했으니까 면밀히 보시고 엄정하게 수사하셔야 됩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늘 서부지검이, 검찰이요 조금 전에 세 번째로 김성훈 경호차장하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기각했습니다. 차장님 혹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얘기 못 들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상식 위원 이것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 이야기 방금 저한테 이야기 듣고 무언가 검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이분들이 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 사람들 김성훈이나 이광우, 특히 김성훈에 대한 이게 구속 상황이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기각 사유나 이런 걸 면밀히 살펴보고……

○이상식 위원 국수본? 잠깐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마 대응책을 강구할 걸로 보입니다.

○이상식 위원 저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한 핵심에 비화폰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화폰. 자꾸 지금 국수본 또 이야기하시는데 돌아가서 가지고 국수본부장한테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전달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진동 대검 차장이 스스로 밝히기를 노상원의 비화폰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현하고 통화한 사실을 대검 차장 이진동이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언론 보도 보면 나오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언론 보도에…… 예.

○이상식 위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비화폰이 수십 명한테 지급이 됩니다, 수십 명한테. 그리고 김성훈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나오거든요, 혐의가.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번이나 검찰에 의해서 반려된 이유는 핵심은 비화폰 서버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내란의 주요 가담자들이 비화폰으로 서로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알다시피 외부와 연결도 안 되고 기록도 없고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폰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김성훈에 대해서 비화폰 관련된 걸 밝혀내야 되는데 국수본부장한테 강력하게 이렇게 전달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감사합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사무총장님, 지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사전투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전투표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통합선거인명부로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망을 깔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조승환 위원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이유가 투표함이 열린다는 겁니다, 투표함이. 투표함이 열려서 그게 분류가 돼서 다시 투표함으로 만들어져서 이송이 되고 또 그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또 다른 지역에서 온 투표용지가 들어간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CCTV가 다 있고 녹화가 다 되고 한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투표한 투표함이 관내 사전투표라든지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함이 그대로 개표소로 가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승환 위원 그런데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해야 된다고 지금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통합적으로 투표를 했으면 통합적으로 개표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는 아이디어를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시도별로 한 13개 정도로, 열서너 개 정도로 나누면, 적절한 인원의 투표소가 이루어지면 그 투표함 자체가 각 선거구별로 가 가지고서 그 자체를 보관해서 그걸 개표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선관위로 보내서 부산시 선관위에서 다소 개표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개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노트북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문제점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쭙보면 개표소는 노트북을 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개표소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중앙 서버에서 1대……

○조승환 위원 그렇지요? 보고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해킹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승환 위원 결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망 분리를 통해서 어떤 유선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VPN을 통해 가지고 가상 망 분리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보안상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결하라는 측면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보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조승환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선거관리 인원에 관한 부분인데 선거협회 같은 거 만드실 생각 없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거협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승환 위원 예, 교육훈련이 평소에도 좀 될 수 있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나 현안 질의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사실 교육을 받지 않는 공정선거 감시단도 많이 있어요, 제가 시군구별로 데이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고 지금 조사, 제도, 점검, 조사까지도 동일인이 다 하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는 그 부분을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지금 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 충분히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개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위험성은 있는데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물 투표고……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현장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구조라서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사전투표와 관련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방금 전에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협회, 교육도 하고 그런 문화를 또 이렇게 실천하고 하는 그런 시민, 건강한 시민 그런 운동이랄까요? 그런 개념의 것이, 그런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내용도 좀 저희들에게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용혜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12·3 내란 이후에 한 달 동안 비상계엄 당시의 강상문 영등포서장 통화 내역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8일, 2월 2일 요청해도 안 줘서 2월 14일에 재차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인 통화 내역까지 썩 다 제출해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경찰청, 서울청, 영등포서, 비상계엄 당시에 핵심 역할을 했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과 통화 내역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선 포함해서 누락 없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영등포서장 핸드폰이 수사 중이라서 제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경찰 입장에서도 체포

조 관련된 혐의를 벗으려면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이 자료를 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옹혜인 위원 여순사건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구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부위원장이요? 행안부……

○옹혜인 위원 차관님이십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지금 차관입니다.

○옹혜인 위원 큰일이네요.

올해 4월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임기가 만료됩니다. 기획단 그대로 재위촉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직 뭐 방침이 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학식과 경험을 고려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 고민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렇게 임명을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직접 임명했던 허만호 기획단장 같은 경우는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이었고 내노라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고요. 나종남 단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정옥 단원은 좌익 세력이 4·3 사건의 진실을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4·3 사건 보고서마저도 부정한 사람이고요. 김계리 단원, 내란수괴 윤석열을 직접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를 옹호하는 변호인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유족들도 수차례 편향된 인식이 우려된다, 반드시 교체해 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만호 단장을 비롯한 위촉직 단원들의 절반 이상이 전현직 국방부 소속입니다. 인적 구성 자체가 민간인, 피해자들 중심이 아니라 가해 주체인 국방부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기간 연장을 위한 법을 개정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왜곡에 대한 우려가 짙은 기획 단원들을 전면 교체하고 유족들을 비롯한 과거사 진상규명에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저조한 사건 처리율로 그리고 태만한 운영으로 유족들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만큼 차관님께서 기획단 재구성을 포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옹혜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호영 차장님, 지금까지 경찰에서 직무 배제된 사람 누구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직무 배제는 세 사람…… 경찰청장하고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국회경비대장……

○**옹혜인 위원** 목현대 경비대장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옹혜인 위원** 군과 너무 다릅니다. 사실은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내란의 두 가지 축이 군이랑 경찰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내부에서 조사하고 끊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경찰을 국민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을 텐데요. 군과 비교하면…… 물론 저는 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군에서는 김대우 장군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우 장군 같은 경우는……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냥 하시지요.

○**옹혜인 위원** 예.

이 두 장군 같은 경우는 2월 2일에 최근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직무 배제 언제 됐는지 아세요? 12월 12일에 직무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문상호 정보사령관 비롯해서 구삼희, 방정환 이런 사람들을 직무 배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란에 구체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부적절할 뿐더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장대리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라는 말씀만 반복하시면서 경찰 내에서 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하는, 국민들의 불신을 끊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인사 조치는 하나도 안 하시고 계시고 오히려 서울청장, 심지어 치안정감 발령도 내지 않은 내정자라고 하는 굉장히 무리스러운 인사를 밀어붙이고 계신 거예요. 수사 핑계로 인사 조치 이렇게 미루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군은 대부분 구속된 경우도 많고 있고요……

○**옹혜인 위원** 아니요, 구속되기 전, 심지어는 피의자 입건되기 거의 두 달 전에도 직무 배제를 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군하고 약간 다른 것이……

○**옹혜인 위원** 그리고 직무 배제된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인사나 이런 게 틀린 것이 저희들은 대부분 치안감 이상은 정부 인사로 움직이고 있고요. 군은 자체적으로 직무 배제, 기소휴직, 약간 우리하고 인사 스타일……

○**옹혜인 위원** 그래서 직무 배제 못 하시겠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 결과도 없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옹혜인 위원** 그게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려면 최소

한 신입 경찰청장 같은, 서울경찰청장 같은 인사는 하면 안 되셨던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서울청의 어떤 치안도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배제하고 배치……

○옹혜인 위원 서울청의 치안 안정이 박현수 국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정리해 주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배제하고 보임의 차이가…… 좀 다른 겁니다.

○옹혜인 위원 이래서 경찰이 신뢰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소방청장님, 죄송한데 제 자리에서 청장님이 보이지가 않으셔서 이쪽 경찰청 차장님 쪽으로 오시든지 발언대 쪽으로……

○위원장 신정훈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윤건영 위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소방청장입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입니다.

행안위에 출석해서 몇몇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장이라는 분도 그러하고요. 오늘 소방청장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염치가 없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조금 전 답변에서, 다른 위원님 답변에서 ‘단전·단수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소방청장 허석곤 아니요, 이상민 장관께서……

○윤건영 위원 단전……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청에서……

○윤건영 위원 단전·단수라는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들었습니다. ‘소방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

○윤건영 위원 아니, 아까는 분명히 단전·단수……

○소방청장 허석곤 아니, 아까……

○윤건영 위원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소방청장 허석곤 아닙니다. 단전·단수 요청……

○윤건영 위원 국회의원이 우스워요?

○소방청장 허석곤 아니,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아까 정동만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가지고, ‘전 행안부장관께서 소방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명확한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 사항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건영 위원 자,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라는 이야기 들었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들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청장이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곧바로 서울소방본부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온 게 있냐, 요청 오면 열심히 해 줘라’, 이게 지시 이행 아니면 뭘니까? 오늘 출석하지 않았지만 소방청 차장도 똑같이 전화를 합니다, 서울본부장에게. 이게 지시 이행 아니면 뭘니까? 거짓말을 정도껏 해야지요.

다음 PPT 띄워 주세요.

하도 제가 얼척이 없어서 지난 1월 15일 날 소방청장이 내란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했던 말 찾아 왔어요. 단전·단수라는 말 분명히 들었잖아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저게 이상민 장관 워딩이에요.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냐? 소방청이 협조 요청 받은 게 있냐?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적의 조치해라’ 그렇게 들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흐릿하게 해요, 단전·단수를 못 들었다는 식으로?

○소방청장 허석곤 아니요. 못 들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속기록 다시 또 확인해요?

아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왜 이래요? 쪽지를 봐도 저 멀리 있다고 그러고……

○소방청장 허석곤 헐끗 봤다고……

○윤건영 위원 헐끗 봐 가지고 단전·단수를 봤다 그러고 여기 행안위만 나오면 거짓말 하고, 어떻게 국조특위 나와서 한 이야기까지도 부정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선관위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입니다. 선관위에서 얼마나 준비를 착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특히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는 준비할 게 많을 걸로 보여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할 건 요청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저희는 선거관리가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조기 대선을 치렀던 2017년도에 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 국회나 정부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그 절차를 밟아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입니다.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마치 조기 대선이 있기를 바라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발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그리고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완벽한 선거관리’ 이렇게 업무보고에 쓰셨는데 현재 심판에서 백종욱 전 차장이 북한의 이메일 해킹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북한의 해킹 공격 중 74%가 이메일 해킹이라고 그랬어요.

선관위 PC도 2021년 북한 해킹조직 ‘김스키(Kimsuky)’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그래서 선관위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보안점검 후속 조치를 했고 그게 총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잘 해결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71점 얼마처럼 그게 저희가 점수를 매긴 건 아니고요.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완벽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완벽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요.

총 186개 후속 조치 대상 중에 174건의 조치 외에 12건의 조치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거 뭔지 밝혀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중장기……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또 질의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선거연수원 건축물대장이 선관위가 얼마나 행정이 미흡하느냐, 이래서 국민 신뢰가 떨어지게 하느냐입니다.

수원에 소재한 선거연수원 내 제2생활관 사례인데요. 선관위가 2019년에 농진청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5년간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민들이 여기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의혹의 시선을 잔뜩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른바 형상기억 종이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20년 21대 총선 개표 현황

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 문치가 발견되니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 게재했습니다. ‘원상회복,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합니다’라는 자막을 삽입했어요. 그런데 이게 형상기억 종이를 투표용지로 사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슬쩍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선관위의 부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각오를 밝혀 주시고 남은 12건 왜 못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12건부터는 이 부분은 국정원 컨설팅 내용 중에서 중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외부망, 서버 재구축 비슷하게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 예산이 확보돼야 이제 실시가 되는 내용이라서 아직 안 된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은희 위원 지금 예산 타령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소하더라도 부정 선거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선거관리의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나름대로 완벽하게는 관리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완벽하게 하신다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잘……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고기동 차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 명절에 전통시장 방문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갔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분위기 어떻던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갔던 곳은 사람은 좀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행이네요, 그나마. 서울이라서 그런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박정현 위원 저도 지역에 갔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PPT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에 이런 제목들로 나옵니다.

‘강원지역 체감경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 ‘대구 기업 80% 작년보다 설 경기 악화’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불황의 늪 빠진 광주·전남 경제’ ‘군산시, 경기 불황 3중고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대전 소상공인 경기 체감 전국 최악’.

경기가 나쁜 거는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난 대정부질문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쨌든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한은 총재도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게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지역경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기부, 산자부, 국토부, 기재부, 아마 모든 부처와 관련될 거고요. 행안부는 여기 써 있다시피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역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걸 해 주셔야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박정현 위원** 한번 돌려 보세요.

지금 한국일보인데요, 한국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국힘 텃밭 영남서도 지역화폐 확대, 급한 불 꺼야…… 국비 지원은 감감’ 이런 제목으로 했고요. 민생경제 최악이라서 포항 등 일부 지역은 4일 만에 지역화폐가 소진이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 텃밭 영남 지역조차 국비 지원을 늘려 달라고 아우성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이 다 지금 지역화폐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경북지역이 지역화폐 발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어려우니까 지역 안에, 어쨌든 자치단체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실제로 중앙정부가 혁신적으로 지원하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겠지요? 그 고려를 지금 하시나요? 추경에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국정협의회 회의에서 충분히 아마 논의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어쨌든 차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당이 2조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합의를 해서 신속하게 좀 지역화폐가 뿌려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시간을 좀 멈추시고 남제현 국장님, 박종섭 차장님, 박현수 직무대행님, 세 분 나오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제현 국장님하고 박종섭 차장 동시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 동의하시는지요, 남제현 국장님?

‘예스, 노’로만 하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가요? 본인은 동의 못한다 이것이지요?

알았어요. 동의 못 한다 이것이지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양부남 위원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 동의하나 이거야.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지금 현재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탄핵이 됐고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박종섭 차장님, 똑같은 질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박종섭 차장님,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 이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생활안전차장 박종섭 ……

○양부남 위원 시간 없어요. 제가 지금 바쁘니까……

뭘 중얼거리요? 빨리 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생활안전차장 박종섭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예? 뭐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생활안전차장 박종섭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남제현 국장님, 정진석 비서실장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정진석 비서실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양부남 위원 전혀 인간관계가 없어요?

잘하세요. 위증될 수가 있어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특별히 알지 못합니다.

○양부남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국수본의 이번에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강력히 주장했던 직원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겠다고 말한 사실 있습니까?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남제현 그런 사실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박현수 직대님,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태원 참사 당시 청장 윤희근 경찰대 7기, 전날 과음으로 새벽녘에야 사실을 인지하고 상경길에 첫 통화한 사람이 지금 서울청장 박현수 경찰대 10기, 당시 국정상황실 파견 총경이었는데 서로 어린 목숨 희생에 대한 내용이나 경찰 근무가 잘됐는지를 알아보지 않고 대통령 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돼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

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청장은 자질이 없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없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예.

○양부남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청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서 영장 청구한 게 세 번 기각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란죄……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경호처 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부남 위원 예. 내란죄 수사의 핵심은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 수색입니다. 이것을 김성훈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영장을 세 번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다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검찰이,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군과 경찰만 전화를 했겠냐, 검찰 수뇌부하고도 전화를 했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이 밝혀질 게 두려워서 검찰이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등검찰청 산하에 보면 영장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 거기에 접수를, 심사 신청을 하면 검사의 영장 기각이 적절한지 여부를 민간인이 판단합니다. 꼭 그 절차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도 강구해서 국수본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마지막인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저 기다리느라고 혼났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1분 더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 5·18보상법 관련자에 의하면 기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이 돼 있는데 거기는 이 기타지원금을 받으려면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자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옛날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할 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8 때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이 사람도 5·18 관련자로 인정이 되는데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되기 전에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거든요, 대통령령이.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을 제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작년 9월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 5·18 때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이것 고쳐야 돼요.

꼭 유념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 이해식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시간이 남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께서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차관께서 국회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것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위원장 신정훈 수치상으로도 사상 최악의 상태라는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도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음식료품 분야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최근 매출이 3년 연속 감소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방재정경제실장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구소멸 지역의 역외유출이라고 하는 게 생산성 저하도 되지만 역외유출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경제 침체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행안부가 이 문제를 자기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문제라고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를 통해서 어제 저녁에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심지어는 국민의힘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국민의힘 자치단체가 거의 60%가 포함되어서 9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민주당 자치단체가 60개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가 15조 9000억 정도 됩니다. 지방정부가 없는 살림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차관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재정 규모라든가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어쨌든 추경에 편성을 할 건지가 아직 확정 안 돼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속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방소멸지역에서 소멸지역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선호하고 있는 정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 상황 속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 과정이

시작되면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께서 2분 정도 추가질문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조은희 위원**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먼저……

○**조은희 위원** 먼저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해식 위원** 그동안 질의가 안 나와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호영 대행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대행의 동창카페 그리고 문자 협박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문형배 대행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수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런 가짜뉴스가 일부 유투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를 통해서 확산시킨 바가 있지요. 특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식 논평을 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형배 대행의 자택 앞에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신공격성 문자 테러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현재 판결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결국은 불복을 하려고 하는 빌드업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판결이 있는 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치안을 강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헌재재판관에 대한 경호나 이런 것도 진행 중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개인별로 다 경찰관 배치해서 신변 경호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지금 문형배 대행 집 앞에까지 가 가지고 과도할 정도의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거기도 기동대 배치해서 집회·시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 확산되지 않도록 사이버수사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도 수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당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사무총장님, 선관위가 부실 선거관리의 오명을 벗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고기동 장관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조은희 위원 앞서 정부와 저희 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해 7월에 무려 13조 원을 현금 살포하는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을 강행했고 9월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법을 졸속 통과시켰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민 누가 비판해요?

○조은희 위원 말씀드립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출신이자 광역단체장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반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추경으로 13조 원의 현금 살포하겠다고 그러는데요.

대행님은 보름 전에 ‘전 국민 25만 원 지급 포기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안 한다니까 정말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대행님은 위헌 논란, 재정 부담 문제, 소비 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반대했는데 한정된 국가 예산을 아껴 쓰고 투자와 성장을 이끄는 미래 분야와 정말 어려운 이들을 위한 편셋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행안부도 정책 일관성을 뒤집거나 현금 살포의 부작용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대행님께서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 정부 입장이 바뀌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까 배준영 위원님 질의 때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 죄송한데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1분 30초 쓰십시오.

○윤건영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죄송합니다.

소방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청장입니다, 위원님.

○윤건영 위원 앞서 소방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입장을 바꿨다라고 나오니다. 입장을 바꾼 겁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저는 국회에서 답변한 자료에도 보면……

○윤건영 위원 아니, 입장을 바꾼 거냐고 제가 여쭙었습니다. 입장 바꾼 거 아니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입장 바꾼 것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고……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PPT 다시 띄워 주세요.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니다, 제가. 특별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주어는 이상민 장관입니다.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냐 소방청장에게 묻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렇지요, 단전·단수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이 투입되면’은 기억 못 한다고 하셨고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적의 조치하라’ 이런 말씀 하신 것 맞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게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예요. 소방청에서 단전·단수할 수 없으니까…… 경찰이 주체거든요, 단전·단수의 주체. 소방청장한테 전화하기 직전에 이상민 전 장관이 조지호 청장한테 전화를 해요, 단전·단수 관련한 것으로 추측되는.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정하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러니까 전 행안부장관께서 어떤 맥락과 취지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제가 알 수도 없고……

○윤건영 위원 그러니까요. 단전·단수 조치의 주체는 경찰이고 소방청은 협조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때 13일 날 위원님께서도 그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단전·단수가 우리 업무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묻잖아요. 질의 길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단전·단수 조치의 주체는 경찰이고요.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에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소방청에는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면 협조해라, 협조 지시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 맥락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건영 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떤 맥락이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신정훈 1분만 더 주세요.

○소방청장 허석곤 아니,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소방활동 상황의 전반적인 걸 물으셨고요. 그다음에 소방청에서는 단전·단수 요청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론사 다섯 곳을 말씀하시고 경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투입인지 다른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절하게 조치하라 이렇게 하는데……

○윤건영 위원 그게 지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즉 경찰에게는 단전·단수를 하라고 한 거고 소방에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도와줘라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어를 잘 해석을 못 하는 겁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윤건영 위원 제 해석이 틀렸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소방청장 허석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맥락이나……

○윤건영 위원 장관님이 아니라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의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소방청장 허석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찰에서……

○윤건영 위원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소방청장 허석곤 경찰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저에게도 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국회와 같은 충돌과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서울본부장과 경기본부장, 다른 시도에 상황 파악을 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건영 위원 다음 PPT 넘겨 주세요.

그러면 왜 서울본부장한테 경찰이 연락이 오면 협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하셔야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서울본부장 자료를 자세히 봤는데요. 경찰의 요청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라고 서울본부장은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일이, 서울본부장께서 서울의 상황을 잘 챙겨 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윤건영 위원 청장이 그렇게 하고 차장이 그다음에 서울본부장한테 전화한 것 보고 못 받으셨어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저는……

○윤건영 위원 차장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거기다 챙겨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소방청장 허석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건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건 소방청장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다시 말씀드리면 장관이 국회와……

○위원장 신정훈 청장, 잠깐만요.

청장이 들었던 사실을 지금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들었던 사실 그 자체, 본인이 이해했던 그 자체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본인은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걱정까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의 걱정. 이미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이제 와서 부정해요. 그 쪽지 본 적은…… 자기 스스로 실토했어요, 결론질로 힐끔 봤다고.

남의 걱정 하지 마시고 본 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서 요청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고요, 명확하게. 그리고 나서 언론사 다섯 곳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찰이 투입, 뭐 봉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요청이 오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이라고 해석을 했을 것 같고요. 요청이 오면 소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됐지요?

○윤건영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쇄까지 나오셨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아니,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장 신정훈 앉아 계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진실은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고요 또 이 중요한 중대사는 어쨌든 간에 밝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대단히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적으로 아주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상 50년, 40년 만에 한 번 있었던 이 비극적인 사태의 주인공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이었다는 것, 대한민국 경찰청의 청장이었다는 것, 대한민국 경찰청의 서울청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부대가 같이 움직였다는 것, 이 진실을 정확히 밝혀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밝히고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야지 13만 경찰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경종도 되고 교육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책임도 묻지 않고,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까지 있는 청와대 근무자 그리고 장관을 보좌했던 행안부 근무자, 대통령 파면되고 탄핵되고 장관 파면되고 서울청장 다 파면됐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가장 책임 있을까요? 도의적으로 따지더라도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술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차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 서울청장의 보직을 임명해야 될 불가피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가장 큰 장관 보좌관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이 파면된 것만으로도 절대로 승진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그게 어디 작은 일입니까? 그런 분들을 곳곳에 승진시키는 이런 인사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요 앞으로입니다. 총경 인사, 경무관 인사 이런 방식대로 된다면요 정말 이것은 내란을 획책하고 연장하는 거예요.

차장께서 이제 남은 인사에 대한 본인들의 인사권을 자기의 권한들을 정말 최대한 작동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장님 말씀의 그런 우려가 없도록 공정한 인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제대로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저를 포함해서……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경찰청장직무대행님께 서면질의를 넣으면서요 부탁을 꼭 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미래치안국장과 장비운영과장 그 소관 업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청장대행께서 직접 챙겨 보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저를 포함해서 김종양 위원님, 모경중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소방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김성희 김종양 모경중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한병도

○청가 위원(1인)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차관보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오병권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조직국장 이창규

의정관 김한수
경찰국장 남제현
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정책기획관 임철언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
차장 박용수
인사혁신국장 유승주
인재채용국장 손무조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기획조정관 도준수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수사국장 김병찬
형사국장 유재성
치안상황관리관 곽병우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어윤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유진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장직무대리 박현수
생활안전차장 박종섭

소방청

청장 허석곤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고영국
화재예방국장 홍영근
장비기술국장 윤상기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진형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차장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조규영

선거정책실장 신광호

정보관리국장 김수연

선거1국장 윤재수

법제국장 도희락

조사국장 조봉기